

2019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8

2019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제주평화연구원 편



서문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분쟁과 갈등의 현장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서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 세력과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한반도는 그 대립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의 냉전이 끝나고 21세기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2015년 이후 매년 연구원 자체 과제로 ‘동아시아 지역 평화인식조사’를 이어오면서 주변국들의 관심과 전략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주춧돌을 놓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의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 형식으로 국제정치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주평화연구원은 소수의 선택된 국가, 지역 혹은 사건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민들의 평화에 대한 인식을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혼용하여 연구 결과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는 총 세 편의 연구 성과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첫째, 도종윤 박사는 ‘동아시아 평화인식조사: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해 본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사와 변화의 추이’를 제목으로 결과물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1~16년까지 있었던 동아시아정상회담(EAS)의 의장 성명을 분석하여 이곳에 참여한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에서 어떤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지 보여줍니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EAS의 지도자들이 다자협력 기구를 통해 자연재해, 인적 자원 개발 등 비전통 안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를 이끌어 가는 동축은 미국, 중국 등 거대 국가가 아닌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 손정욱 박사는 ‘빅 데이터로 살펴본 국가 간 평화관계 분석: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한일관계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손 박사는 구글(Google)이 제공하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일 간 평화관계의 양상을 추적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먼저 구글의 데이터는 한일관계의 경향을 분석하는 적절한 자료로 사용이 되어 향후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분석 결과 2012년 10월,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한일 간에는 전환점이 발생하였고, 이때 정치적 긴장과 해소가 부침의 전기를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동균 박사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 동아시아 주요국 간 정상회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연구물을 내놓았습니다. 한 박사는 우선 중국이 최근 동아시아 정치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음을 주지의 사실로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자국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 속에서 동아시아지역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강대국들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에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제주평화연구원의 공동연구 보고서는 비록 소수의 연구진이 만든 작은 성과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의 지원과 성원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다양한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성과가 대한민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국제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 그리고 관련 전공자들에게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장
김봉현

■ 서문 _ 김봉현 / 5

제1장 동아시아 평화인식조사: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해 본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사와 변화의 추이

• 도종윤

- I. 서론 _ 11
- II.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요 _ 16
- III. EAS의 실제: 각 회의의 특징 _ 20
- IV. 분석 결과 _ 32
- V. 결론 _ 36

제2장 빅 데이터로 살펴본 국가 간 평화관계 분석: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한일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 손정욱

- I. 서론 _ 47
- II. 평화 연구와 빅 데이터 _ 50
- III. 한일 평화관계 분석: 1998년부터 2019년까지 _ 57
- IV. 결론 _ 76

제3장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
동아시아 주요국 간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 한동균

- I. 서론 _ 99
- II. 중국의 대(對)동아시아 정책 고찰 _ 101
- III.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_ 119
- IV. 결론 _ 137

■ 필자 소개(원고 게재순) / 145

동아시아 평화인식조사: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해 본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사와 변화의 추이

도종윤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1. 문제제기

동아시아(East Asia) 지역은 지금 세계 경제와 정치를 이끌고 있는 핵심지대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지역에는 글로벌 정치의 주요행위자인 중국, 일본, 한국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또한 세계의 주요 산업 국가이다. 이에 더해 아세안을 포함할 경우 그들이 차지하는 인구와 경제력은 전 세계 몫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먼저 동아시아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개념을 분명히 해

야 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지역/영역(Region/Area)의 구분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은 각 국가(혹은 외교단위)의 고유한 문화적 습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유럽연합(EU)의 대외관계청(EEAS)은 동아시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시아’라는 항목으로 크게 묶어 두고 있는 반면, 미국 국무부는 지역(Region)구분 없이 국가/영역 구분만 해두고 있다.¹⁾ 또한 CIA의 월드팩트는 ‘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구분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는 별도의 분류가 없다.²⁾ 문자적으로 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와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를 모두 아우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북아시아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많은 경우 동아시아를 곧 동북아시아와 거의 같은 지역으로 인식하여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몽골, 남·북한, 대만 등이 포함된 지역을 일컬으며 홍콩과 마카오가 아울러지기도 한다.³⁾

국내 문헌에서는 동아시아를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손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이 표방하는 지역으로서 동북아가 중국과 일본을 엮는 가운데 중심을 차지하려는 공간인 반면, 중국은 동북아를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은 동북아를 환일본해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⁴⁾ 따라서 동아시아는 동북아 3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공간을 의미하므로 대략 아세안+한·중·일을 그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

1)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2) C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docs/refmaps.html>

3) 대중 온라인 문헌인 위키피디아(영문)가 대표적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East_Asia

4) 손열, 제1장 “서문: 지역, 지역주의, 동아시아,” 정용화 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양평: 지식마당, 2006), p.15.

다.⁵⁾ 한편, 동아시아는 역사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구분되기도 한다. 동아시아는 곧 서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서구식 근대 질서가 훗날에 이식된 문화적 독자성이 강한 아시아의 지역을 가리킨다. 즉 이식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19세기 이후 근대 주권 국가 개념이 도입된 유교문화권의 국가들(한국, 중국, 일본)을 동아시아로 인식하는 것이다.⁶⁾ 역사사회적인 구분으로 보더라도 지리적 구분보다 명확한 것은 아니다. 즉 지금의 동북아시아만을 동아시아로 구분해 낼 수 있지 않다. 문화적으로 볼 경우 문자를 기준으로 중국(C), 일본(J), 남북한(K)은 모두 한자(유교) 문화권이므로 동아시아의 범위는 일부 동남아국가로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동남아국가로 분류되는 베트남(V)이 한자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문화는 이들 4개국(CJKV)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시 조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를 보다 넓은 개념으로 확대하려 한다. 즉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이 보고서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의 회원국들 구성을 보더라도 대략 일치하는 범위이다.

이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 주요 지도자들의 대외 외교, 정치 그리고 평화와 번영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분석하려 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아세안 국가 및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이다. 아세안이 날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과 일정한 교점을 찾으려는 역외의 국가들이 함께

5) 손열(2006), p.16. 더 나아가 일본은 동아시아의 범주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추가하고자 한다. 같은 책 참조.

6) 전재성,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서울: EAI, 2011).

동아시아와 세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회의의 형태로는 느슨한 지역 포럼에 가깝지만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인다는 면에서 아세안+3와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은 어떤 점에 가장 관심을 갖는가? 둘째, 그러한 관심사는 무엇과 가장 큰 연관성을 갖는가? 말하자면 그것은 어떤 언어를 통해 표현되었는가? 셋째, 정상들은 동아시아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실제 아시아의 지도자들이 평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추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사회학이나 문화적으로 독자성을 갖는 지역이다. 동아시아정상들은 그들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며 이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발신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회의를 통해 그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동아시아 정상회담은 일종의 다자주의 회의이므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 있을 수 있다. 이는 슬로건으로, 혹은 실천 공약으로, 아니면 다른 돌발 상황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2. 보고서의 범위와 구성

본 보고서는 2011년 제6차 회의 이후 최근 6차례의 동아시아정상회의의 담론을 분석한다. 2011년을 시점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때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면서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정치적 지형이 크게 바뀐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주된 자료는 의장 성명(Chair's State-

ment)이며 이와 연관된 문서화된 자료들도 일단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를 분석할 도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다루는 소프트웨어인 NVIVO10로 하였다.⁷⁾⁸⁾

한편, 본 보고서의 연구 자원(resource)은 각 회담에서 발표된 정상회담의 선언문(Chairs statement)이다. 이는 각 회차별로 회담 주최국이 올린 문서를 관련 홈페이지에서 입수하여 자료가 담고 있는 어휘 분석을 통해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서론에 해당하는 I절에 이어 II절에서는 EAS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배경, 구성 등을 서술한다. 각 회담은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의장 성명 외에도, 이슈별로 지도자 성명(Leaders Statement), 미디어 공동 성명(Joint Media Statement),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Chair's statement of Foreign Ministers's Meeting), 실천 계획(Action Plan), 선언문(Declaration) 등이 별도로 발표되기도 한다.⁹⁾ 이는 회담 주최국이 어떤 점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 각 회담의 주요 관심사가 어느 쪽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를

7) 질적 자료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CAQDAS)으로는 NVIVO, MAXQDA, ATLAS.ti, Dedoose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파랑새'도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다. NVIVO의 특징은 문서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SNS 등을 담화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여기서는 문서(text) 분석에 그치려 하며 노드(node)를 중심으로 '근거이론'을 적용하려 한다.

8) "동반자관계(partnership) 외교 연구: 한국-EU, 한국-러시아, 한국-중국 문서를 중심으로" 2016 지역통합연구부 과제, II. 연구방법, 2. 근거이론, 3. CAQDAS: 질적 자료분석을 위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 참조.

9) 예컨대 2018년 제13차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의장 성명 외에도 분야별 지도자 성명 5개, 공동 미디어 성명 1개, 외교장관 회의 의장 성명 1개 등 총 8개의 각종 성명이 발표되었다.

알 수 있는 질적 자료가 된다. 비록 이 보고서가 이 같은 모든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특히 정상 회의 의장 성명과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들은 별도의 소개 없이 다루려고 하였다. 이처럼 회담의 개괄적인 서술은 본 연구 본격적인 조사와 분석에 앞서 사전 전체의 성격을 띤다. 이어서 III절에서는 각 EAS의 실재를 다룬다. 각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무엇이 관심사였는지, 회의 및 의장 선언문의 특징을 서술한다. IV절에서는 각 선언문에 부호화를 통하여 추출된 어휘들을 기본으로 실질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III절에서 주로 어떤 것들이 관심사였는지의 추이를 정성적으로 보았다면 VI절에서는 빈도수와 클로스터 분석을 통해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이번 조사의 결과와 의의에 대하여 토론하며 마치도록 하겠다.

II.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요

1. 배경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이하: EAS)는 인도양-태평양 지역에 면하고 있는 18개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포럼이다. 첫 구상은 1991년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아시아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지역협력체로 발전시키고자하는 것이었고 2002년에는 아세안+3을 기초로 아시아 연구 집단(East Asia Study Group)에 관한 첫 보

고서가 발간되었다. 이어서 200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바탕으로 EAS가 첫 출범을 하게 되었다. 이 선언에서는 EAS가 ‘전략 대화와 협력을 위한 포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선언에 따르면 첫째, 관련국들은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설립하며, 둘째 아세안 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고, 셋째 EAS의 성격은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을 지향하되 아세안의 보편적 가치와 글로벌 규범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대외지향성 포럼이 되도록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집중 관심 분야는 지역의 정치, 안보 등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고, 개발, 금융안정성, 에너지 안보, 경제 통합, 좋은 정부, 투명성, 기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빈곤퇴치, 그리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등을 촉진하며, 자연 재해와 질병 대응뿐 아니라 사람 대 사람, 문화적 이해 등을 통해 구성원 간 상호이익과 연대감을 촉진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¹⁰⁾ 당시에는 아세안+3에 인도와 오세아니아 일부 국가들이 기반이 되었지만, 2011년 제6차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면서 지금의 18개국을 유지하고 있다. 포럼 참여국들은 이 지역이 당면한 정치, 안보, 경제에 관한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토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한다.

2. 구성

EAS는 총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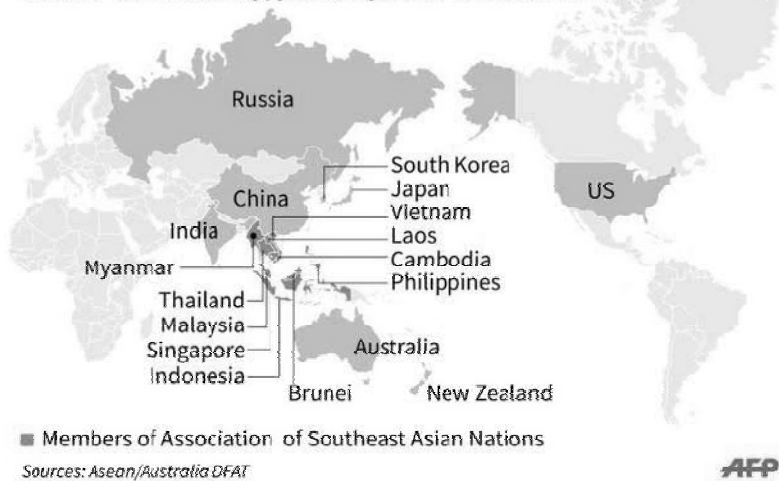
10) “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 Charter,” <https://asean.org/asean/asean-charter/kuala-lumpur-declaration/>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한국, 미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친 지역의 규모는 놀라울 만큼 거대하다. 즉 EAS 국가들을 모두 합칠 경우 세계인구의 54%, 글로벌 GDP의 58%를 차지한다.¹¹⁾ 중점 협력 분야는 환경/에너지, 금융, 교육, 보건, 재난관리, 아세안과의 연계성 등이며 중 회의체는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등이며 그중에서도 정상회의가 가장 중심적인

〈그림 1〉 EAS 참여국

East Asia Summit

Leaders' summit in Naypyidaw, Myanmar on November 12-13



출처: AFP

11)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n Government, "East Asia Summit," <https://dfat.gov.au/international-relations/regional-architecture/eas/Pages/east-asia-summit-eas.aspx>

〈표 1〉 역대 아시아 EAS 개최지와 주제

개최일(차수)	개최지	의장명	주제
2011.09.18~19 (6차)	인도네시아, 발리	Susilo Bambang Yudhoyono 총리	ASEAN Community in a Global Community of Nations
2012.11.19~20 (7차)	캄보디아, 프놈펜	Hun Sen 총리	ASEAN: One Community, One Destiny
2013.10.09~10 (8차)	브루나이, 반다르 세리 바가완	술탄 Hassanal Bolkiah	-
2014.11.12~13 (9차)	미얀마, 네피도	Thein Sein 대통령	-
2015.11.21~22 (10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Najib Razak 대통령	Our People, Our Community, Our Vision
2016.09.06~08 (11차)	라오스, 비엔티엔	Thongloun Sisoulith 총리	Turning Vision into Reality for a Dynamic ASEAN Community

출처: 저자 작성

역할을 한다. 정상회의는 매년 아세안+3정상회의와 연이어 개최되며 세계 주요 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외교장관회의는 당초 아세안+3 정상회의에 맞춰 업무 오찬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나 2008년 제7차 회의부터는 별도의 비공식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고위관리회의는 정상회의/외교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차관보급 실무 회의로 EAS의 활동 및 협력 사업 조정, 주요지역이나 국제이슈에 관해 사전 의견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¹²⁾

12) 외교부, "동아시아 정상회의," http://www.mofa.go.kr/www/wpge/m_3940/contents.do

III. EAS의 실제: 각 회의의 특징

1. 제6차 EAS

1) 개요

제6차 EAS는 2011년 11월 18~19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가 보다 큰 주목을 끈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처음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EAS는 16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게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여함으로써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첫 EAS 참여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교장관이 참석하였다. 뉴질랜드도 총리가 불참하고 장관급으로 대신하였다. 주목을 끌었던 것은 역시 미국의 움직임이었다.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호주 북부에서 군사훈련에 임한 문제는 논쟁거리였다.

줄리아 질라드(Julia Gillard) 호주 총리는 호주 북쪽에서 행해진 미국과의 군사훈련은 이 지역에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대비 훈련이었으며 통상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난대비 훈련이라면 아세안 국가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¹³⁾ 중국 대표로 참여한 윈 자바오(Wen Jiabao) 총리는 EAS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의 관련국들(필리핀,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 분쟁을 원

13) *Sydney Morning Herald*, "Invite China's army: Jakarta," November 21, 2011.

치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즈음하여 서방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EAS를 통해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일단 중국에 압박감을 느끼도록 한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미국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간에 별다른 결전이 없었던 것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¹⁴⁾

2) 의장 선언문의 특징

제6차 EAS의 대주제는 '국가들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아세안 커뮤니티(ASEAN Community in a Global Community of Nations)'였다. 의장 선언문은 총 41개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주제에 따라 분류하면 서문(11개 항), 에너지와 환경(4개 항), 금융(3개 항), 재난 대응(5개 항), 교육(3개 항), 글로벌 보건 및 전염병(1개 항), 연계성(2개 항), 기타 분야로 경제 통합(3개 항), 역내무역(1개 항), 지역 및 국제 이슈(1개 항), 해양 협력(1개 항), 군축 및 비핵확산(6개 항) 등이었다. 서문을 제외하고 항목별 단일 소주제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군축 및 비핵확산이었고, 단일 항목은 아니지만 세부 분야로 나뉜 것을 고려하여 같은 주제로 엮인 것은 7개 항(금융, 경제통합, 무역)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것은 경제 분야였다.

한편 성명서의 텍스트에 나타난 지시어(reference)를 주제별로 분류한 노드(nodes) 분석을 살펴보면 노드는 총 22개로 묶였고 지시체는 36개가 추출되었다. 가장 많은 지시체를 가진 노드는 Natural Disasters

14) BBC News, "Obama's victory over China?" November 21, 2011.

(5회), Financial Cooperation(4회), Economic Integration(3회) 등의 순이었다. 앞서 항목별 분류에서도 드러났지만, 지시체로 묶인 것만 보아도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Norms, Democracy 등 가치 지향적인 노드도 묶였으며 Climate Change, Sustainability 같은 개발과 발전의 공존이 필요한 분야도 언급되었다. 2011년 제6차 EAS 의장 성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어휘는 Cooperation으로 35회였고 Disasters(18회), Education(16회), Japan(11회), Energy(8회), China(7회), Connectivity(7회), Integration(7회), Maritime(7회), Partnership(7회), Sustainable(7회) 등이 의미있게 출현하였다.¹⁵⁾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미국과 러시아 등이 새로 가입한 중요한 전환점이 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감이 성명서에서는 의미있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해양안보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해양협력(AMF) 항목을 따로 두고 이는 아세안 해양 포럼(AMF)을 통해서 이슈를 다루자는 것으로 천명하고 EAS는 직접 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지는 않겠다는 점을 비교적 분명히 하였다.

15) 최소 3글자 이상을 기준, 상위 1,000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저자의 리뷰 과정에서 동사를 제외하였다. 실제로 빈도 분석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어휘는 cooperation과 더불어 EAS, welcomed 등이지만 이들은 성명서의 핵심 의미를 담고 있지 않거나 문장의 주격 혹은 동사에 해당하는 기능적 역할에 머물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 같은 핵심 의미 기준 어휘 필터링은 7차 EAS 이후 모든 성명서 분석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제7차 EAS

1) 개요

제7차 EAS는 2012년 11월 19~20일 사이에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아세안: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운명(ASEAN: One Community, One Destiny)”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어느 때보다 아세안의 결속력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경제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과 해양 안보에서 그들의 공통입장을 찾는 데 주력한 모습이었다. EAS에 앞서 8월에 열린 아세안회의에서 EAS의 주최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발족 45주년을 맞는 아세안을 축하하면서 2010년 기준 아세안의 총 GDP 규모가 미화 1.9조 달러에서 2011년에는 2.2조 달러에 이르러 경제성장률은 7.5%였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 성과를 내는 곳이라면 아세안의 강력해진 힘을 천명하였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EAS에서 아세안의 역할이 미국,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결코 적지 않다는 자신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더욱 주목받은 문제는 점차 고조되는 해양갈등이었다. 당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아세안의 여러 국가들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분쟁이 격화될 위기에 있었기에 평소 다루던 경제 문제가 다소 관심 밖으로 밀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지역의 해양 안전은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 지역의 긴장해소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입장은 줄곧 해양 문제를 양자적 해법으로 풀자고 하는 반면, 이해 당사국인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국제포럼 등에서 풀자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다. 양자의 입장에 대해 미국은 모든 (해양) 문제는 관련 국제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을 밝혔다. 한편,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Noda Yoshihiko) 총리는

동아시아의 모든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일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¹⁶⁾

2) 의장 선언문의 특징

제7차 EAS 의장 성명은 별도의 52항목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성명의 특징은 별도의 소주제 분류 없이 전체 항목을 단일하게 나열하였다는 점이다. 내용상 특이점은 곳곳에 미국의 협력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대 테러리즘에 대한 아세안-미국과의 협력(37항), 해양 협력 분야에서 해적소탕 등에 관한 미국의 의중 지지(45항)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6자 회담의 조속한 속개(37~38항)와 비핵확산에 대해서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었다(38항, 47항).

3. 제8차 EAS

1) 개요

2013년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브루나이의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에서 제8차 EAS가 개최되었다. 러시아는 여전히 대통령이 아닌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였고 미국은 가입 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아닌 국무장관(존 케리)이 참석하였다. 특히 해양 질서에 대한 논의가 이전 포럼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해양에 대한 관심은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당사자국들뿐 아니라 역외 국가

16) *The Guardian*, "Obama urges Asian leaders to step back from territorial disputes," Nov. 20, 2012.

들로까지 확대되었다. 일본의 아베(Abe) 총리는 해양은 글로벌 차원의 공동 재산이며 개방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는 질서는 힘(force)이 아닌 '법(law)'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관련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세안의 해양 포럼(EAMF)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EAS의 모든 국가들이 이 포럼의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⁷⁾

2) 의장 선언문의 특징

제8차 EAS는 별도의 대주제 없이 의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7회 EAS 의장 성명과 다른 것은 소주제 분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론(8개 항), 에너지(3개 항), 환경(3개 항), 자연재해 관리(5개 항), 교육 및 인적 교류(7개 항), 글로벌 보건 및 전염병(3개 항), 금융(1개 항), 연계성(2개 항), 무역 및 경제(3개 항), 아세안과 동아시아의 경제연구(1개 항), 식량안보(2개 항), 해양 안보 및 협력(2개 항), 비전통 안보 및 비핵확산(5개 항), 기타(7개 항) 총 52개 항으로 구성되었고 서두에서 구성원들이(We) 쿠알라룸푸르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번 의장 성명에서는 중국의 입장이 눈에 띄었는데, 2012 EAS에서 채택된 EAS개발 이니셔티브에 관한 프놈펜 선언(Phnom Penh Declaration on East Asia Summit Development Initiative)의 이행 계획(Action Plan)을 만들 것을 제안한 것이다(제5항). 이는 그동안 주로

1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he Eighth East Asia Summit 2013," https://www.mofa.go.jp/region/page3e_000110.html

미국 등과 양자 회담을 통해 지역 이슈를 논의하거나 해양 문제 등에서 수세적 입장으로 일관하던 중국이 모처럼 적극적인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아세안의 중심성을 계속 강조하였다는 점이다(3, 6항). 이는 EAS의 정치적 주도뿐 아니라 사무국을 통해서도 아세안이 실질적인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또한 한국은 2014년에는 민간인들이 모이는 Track II 대화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과 관련된 항목이 언급된 것도 눈에 띈다. 의장 선언문은 후반부에 중요한 국제이슈들을 언급하였는데 주로 다자적 협력기구(G-20, WTO, APEC)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가운데 ‘한반도(Korean Peninsula)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보, 안정을 위해 평화로운 대화가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6자 회담의 속개를 촉구하였다(50항).

4. 제9차 EAS

1) 개요

제9차 EAS는 2014년 11월 12~13일 양일간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Nay Pyi Taw)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의 특징은 그동안 대통령/총리가 불참하던 EAS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고위급으로 참석하였다는 것이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였다.

내용을 보았을 때 평가는 다소 비판적이다. 이는 제9차 EAS뿐 아니라 그동안 이뤄둔 성과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여전히 도전과제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우선,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아직 확고한 정체성이나 의미있는 정책 견인력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이 지역의 확장 아키텍처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둘째, 따라서 ASEAN의 의장국인 말

레이시아가 2015년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EAS의 정체성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며, EAS 회원국들이 점차 이 정상 회담이 지역의 핵심 요소가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정체성은 주로 안보 부분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EAS는 전략적 문제에 중점을 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최고 포럼으로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합의된 비전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구성의 다른 요소들과 명확한 관련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AS가 정상회의 사이의 추진력을 유지하고 정책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조정하는 수단을 갖기 위해서는 더 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¹⁸⁾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된 것은 EAS가 다양한 의제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로건에 그치는 활동들이 많고 아세안의 다른 여러 지역협력체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이나 오세아니아, 러시아, 미국 등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 이는 여전히 이들이 EAS에 의구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의장 선언문의 특징

제9차 EAS 의장 선언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주제 없이 소주제 분류만 택하여 구성되었다. 서문(6개 항)에 이어 금융(1개 항), 환경 및 에너지(6개 항), 교육(4개 항), 글로벌 보건과 전염병(2개 항), 자연재해 관리(3개 항), 연계성(3개 항), 지역경제 통합(3개 항), 경제 연구 기구 설립(1개 항), 비전통 안보(1개 항), 군축과 비핵확산(2개 항), 해양안보 및 협력(3개 항), 식량안보(2개 항), 테러리즘 예방 및 초국경범죄(1개

18) Nick Bisley and Malcolm Cook, *How the East Asia Summit Can Achieve its Potential*, ISEAS perspective, Singapore, Oct. 28, 2014.

항) 등이었고 이어서 한반도 문제, ISIL, APEC, ASEM, WTO, G-20 등이 포함되어 총 52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새롭게 눈에 띄었던 것은 ISIL이 지역 이슈로 포함되었다는 것인데 (40~45항) 테러리즘은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이는 지역을 넘어선 초국경적 인식을 전파하는 데 힘을 쏟은 결과로 풀이된다. 한반도에 관한 내용도 눈길을 끌었는데 그중에서도 신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내건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와 한반도의 신뢰구축 과정(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이 의장 성명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EAS의 관심은 2005년의 9.19합의에 따른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50항).

5. 제10차 EAS

1) 개요

제10차 EAS는 2015년 11월 21~22일까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2005년 말레이시아 주도로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바탕으로 동력을 얻는 EAS는 발족 10년을 맞아 원 주도국인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이 되었다. 그동안 해양 협력과 관련하여 줄곧 관심을 받았던 중국은 의장 성명에서 남중국해(South China Sea)가 언급되면서 중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EAS 회원국들의 견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리커창(Li Keqiang) 총리는 모두 연설에서 과거 명나라의 정화(Zheng He)의 원정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1인치의 땅도 차지하지 않고 지역 종교와 문화를 전적으로 존중했으며”, “... 현지 사람들과 무

역 및 우호적인 문화 및 기술 교류를 수행하여 평화의 사절로 활동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서해로 향해하는 정화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좋은 미덕과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 이웃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실천한 최초의 인물 중 하나”라면서 중국의 지역 안보에 관점은 이 같은 정신에 뿌리를 둔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역경제 통합이 당면한 글로벌 도전의 탈출구임을 강조하면서 “한중일 FTA와 RCEP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지역의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보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이며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안보라는 새로운 보안 비전을 지지하고 EAS 틀에서 안보 개념 및 아키텍처에 대한 새로운 토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¹⁹⁾

2) 의장 선언문의 특징

제10차 EAS 의장 선언문은 이전과 달리 회의의 전체 방향을 제시해주는 슬로건으로 “Our People, Our Community, Our Vision”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선 포럼에서도 나왔듯이 정체성에 대한 비판과 실천력에 대한 의구심이 전문가들로부터 생기면서 2년간 채택되지 못했던 대주제를 다시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분류는 서문을 제외하고 에너지(1개 항), 교육(1개 항), 금융(1개 항), 글로벌 보건 및 전염병(3개 항), 환경과 자연재해(2개 항), 아세안 연계성(1개 항), 해양협력(2개 항), 군축 및 비핵확산(1개 항), 남중국해(5개 항), 한반도(1개 항), 기타 중동 및 비전통 안보 등이 거론되었다. 이번 성명에서 새롭게 보였던 것은 먼저 해양 협력 분야에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19)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ull text of Premier's speech at the 10th East Asia Summit,” Nov. 25, 2015. http://english.www.gov.cn/premier/speeches/2015/11/25/content_281475241888610.htm

Technologies)를 접목하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술은 그동안 EAS의 안보 분야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못하였으나 앞선 기술을 통해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하면 협력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함을 표명하였다(14~15항). 그다음으로는 남중국해 문제가 직접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의장 성명에서는 ‘해양협력(Maritime Cooperation)’이라는 간접 조항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 관련국들의 해양 분쟁을 다루었으나 이번 회의는 이를 직접 의장 성명에 담은 것이다(17~21항). 마지막으로 난민/이민자 문제(27항)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유럽에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이민민/이민자 문제는 그동안 동아시아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중동만큼 주변에 심각한 분쟁과 난민이 발생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을 회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²⁰⁾

6. 제11차 EAS

1) 개요

제11차 EAS는 2016년 9월 6~8일까지 라오스의 비엔티엔(Vientiane)에서 열렸다. 대주제는 “Turning Vision into Reality for a Dynamic ASEAN Community”로 아세안의 중심성을 보다 강조하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더욱 본격화된 동남아 연안의 해양 협력은 여전히 가장 주목받은 주제였다. 더욱이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잇는 지역은 각종 테러리즘과 선박납치 등이 빈번한 위험지대이다. 이에 대해 인도의 나란드

20) 이와 관련된 해석은 제IV절의 분석결과에서 다룬다.

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테러 위협은 더 위험한 비율로 증가했다”면서 특히 해양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는 아세안이 인도의 해양 지역과 관련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한 경험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환경 악화를 방지하며 푸른 경제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해상에서의 일반적인 보안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였다.²¹⁾

2) 의장 선언문의 특징

앞서 언급한 대로 제11차 EAS는 10차 회의처럼 대주제를 제시하였다. 대주제에서 이미 아세안의 중요성을 보다 강력하게 표현하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는 매우 평이하였다. 서론에 이어 협력의 6개 영역을 환기시키고(energy, education, finance, global health including pandemics, environment and disaster management, and ASEAN connectivity) 이와 관련된 비전과 예정 사업들을 나열하였다. 에너지(1개 항), 교육(3개 항), 금융(1개 항), 글로벌 보건 및 전염병(2개 항), 환경 및 재난 대비(4개 항), 아세안 연계성(2개 항)이 언급되었고 해양협력(2개 항), 군축 및 비핵확산(1개 항), 식량 안보(1개 항) 등이 언급되었으며 총 31개 항목이었다.

이번에도 지난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 문제가 의장 성명

21) Remarks by Prime Minister at the 11th East Asia Summit held on 8 September 2016 in Vientiane, Lao PDR, September 08, 2016, <https://mea.gov.in/aseanindia/SpeechStatementEAS.htm?dtl/22610/Remarks+by+Prime+Minister+at+the+11th+East+Asia+Summit+held+on+8+September+2016+in+Vientiane+Lao+PDR>

의 한 개 항(24항)을 차지하였는데, 1982년 UN해양법 협약(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준수하고 이 지역을 비군사 지대로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한반도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는데 2016년 8월 23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 ballistic missile) 위협성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추가된 내용은 불법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을 감시하기 위한 지역 협력이 필요하고(29항), 야생동물 및 목재 불법 반출에 대응한 협력을 강조하였다(30항).

IV. 분석 결과

1. 노드와 지시체

이어지는 절에서는 각 회담에 대한 분석결과를 서술하도록 한다. 먼저 2011~16년까지 6년간 발표된 의장 성명은 부호화(coding)를 통해 다음과 같이 노드(node)와 지시체(reference)가 추출되었다. 2011년(6차) 노드 22개, 지시체 36개, 2012년(7차) 노드 20개, 지시체 44개, 2013년(8차) 노드 28개, 지시체 51개, 2014년(9차) 노드 29개, 지시체 53개, 2015년(10차) 노드 23개, 지시체 32개, 마지막으로 2016년(11차) 노드 23개, 지시체 28개 등이었다.²²⁾

22) 〈부록 1〉 참조.

분석 대상인 6개의 의장 성명을 통합하여 노드는 52개로 분류되었다. 노드와 지시체를 빈도순으로 나열한 결과 Natural Disasters(자연재해)는 6개 성명에서 24개의 지시체를 Human Resource Development(인적자원개발)는 5개 의장 성명에서 15개의 지시체를, Non-Traditional Security(비전통안보)는 6개 의장 성명에서 14개의 지시체를, Connectivity(연계성)도 6개 의장 성명에서 13개의 지시체를, Health Issue(보건)도 6개 의장 성명에서 12개의 지시체를, Nuclear non-proliferation(비핵확산)도 6개 의장 성명에서 12개의 지시체를, Climate Change(기후변화)는 5개의 의장 성명에서 11개의 지시체를 Promoting Maritime(해양협력)은 6개 의장 성명에서 10개의 지시체를 추출하였다. 지시체 분류가 많다는 것은 EAS 정상들이 그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며 또한 그와 관련된 사업이나 비전, 계획 등을 많이 언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관심분야의 응집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토론할 수 있다.

첫째, EAS정상회의의 정상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더위, 해양, 그리고 산악 등 다양한 자연 조건을 가진 EAS 회원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느 다자주의 회의에서나 자주 언급되는 것이지만, 교육 훈련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인적 자원 개발 혹은 교육을 자주 강조하였고 지역의 대학 활동을 장려하고 연구소 설립을 통해 EAS 회원국들의 사업 동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모든 정상회담에서 드러났다.

셋째, 주목할 만한 것은 비전통 안보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EAS의 6개 우선 관심 분야(Environment and Energy, Education, Finance, Global Health Issues and Pandemic Diseases,

Natural Disaster Management, and ASEAN Connectivity)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전통 안보가 모든 의장 성명에서 반드시 등장하였고 또한 자주 언급되었다. 더 나아가 비핵확산 관련하여서도 모든 의장 성명에 포함되었는데 비전통 안보와 비핵확산(전통안보)을 합칠 경우 26개의 지시체로 가장 많은 지시체를 차지하게 된다. ASEM, 3국 협력 사무소 등 동아시아의 종합 다자 협력 포럼에서는 정치와 안보와 관련된 언급이 거의 없거나 비전통 안보에 대해서만 짧게 다루게 된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EAS 의장 성명은 거의 매번 정치,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더해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협력 문제(6개 의장 성명에서 10번의 지시체 추출)가 꾸준히 거론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7차, 10차 EAS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각 정상의 기조연설에서 언급될 만큼 뜨거운 이슈였다. 아세안의 관련 당사국들과 중국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체적인 논조는 국제법에 따르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는 여전히 매번 회의에서 긴장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아세안의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EAS가 쿠알라룸푸르 선언에 의하여 아세안+3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EAS에서 제안된 사업도 대체적으로 아세안 국가의 실천 사업을 기반으로 하며 전체적인 사업의 조율이나 기획이 대부분 아세안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비록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들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

23) 도종윤, “동아시아 평화인식 조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을 통해 본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사와 변화의 추이,” 2018 JPI 공동 과제 참조.

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비판 의견도 있었지만, 실천력과 재정능력, 지도력 등에서 여전히 아세안 국가들의 능력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고 이로 인해 정체성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것은 ‘민주주의(1개의 의장 성명에서 1번의 지시체)’, ‘인권(2개의 의장 성명에서 3번의 지시체)’ 등 서구사회의 주류 담론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EAS 국가들이 주권 국가로서 대외관계 문제에 주로 관심이 있는 반면, 사회적인 문제 혹은 사회적 연대와 관련된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함을 의미한다. EAS 국가들이 여전히 권위주의 국가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민주주의, 인권 등을 다루지 못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인도차이나 반도 일부 국가와 중국 등 사회적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을 우선시하며 국제사회의 간섭을 경계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빈도 분석/어휘 클라우드/클러스터 분석

2011~16까지 EAS 의장 성명을 통합하여 어휘 빈도수를 추출하였을 경우 유의미한 어휘 기준(예를 들면, 동사, 단체를 뜻하는 주격 명사 제외)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Disaster(91회), Security(91회), Energy(84회), Connectivity(70회), Development(68회), Education(50회) 등의 순서였다.²⁴⁾ 국가명으로는 China(54회), Japan(46회), Australia(36회) 등의 순이었다. 자연재해, 안보, 에너지 등이 상위 순위에서 언급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노드-지시체 관계와도 같은 맥락에

24) <부록 3> 2011~16 어휘 빈도수 및 <부록 4> 어휘 클라우드 참조.

있다. 국가순으로는 역시 중국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해양 협력 등에서 자주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각종 실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휘의 연관성을 근거로 클러스터 분석을 했을 경우 Disaster 를 중심으로 ASEAN, Australia, Meeting, Japan, Management 등이 군을 형성하고 있다.²⁵⁾ 이는 disaster와 관련된 국가 단체, 혹은 관련된 실천 사업과 관련하여 연관성을 가진 어휘들이 군집을 형성한 것으로 각 어휘가 문맥상에서 얼마만큼의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언급된 어휘 빈도수만큼 차지하는 3차원 상의 공의 크기가 크지만(좌상) 다른 어휘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외따로 떨어져 있다. 또한 한반도 문제와 연관성이 큰 핵(nuclear) 역시 상단에 따로 떨어져 있으며 해양(maritime)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다른 어휘들과 연관성이 적거나 응집력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것은 비록 의장 성명에서 자주 언급은 되었지만, 유기적인 표현이 되지 못했거나 관심사가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연계되지 못했음을 추정케 해준다.

V. 결론

본 보고서는 2011~16년까지 EAS의 의장 성명을 분석하여 동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이 다자주의 협력체에서 어떤 관심사에 주로 집중하고

25) 〈부록 5〉 클러스터 분석 참조.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지도자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인식을 추출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번 분석을 통해 추출해 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EAS의 지도자들은 자연재해, 인적 자원 개발, 비전통 안보/비핵확산, 연계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연계성을 제외한 다른 관심사들은 최근 평화의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전통 및 비전통 안보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갖되, 자연재해나 교육 문제 등 지구의 미래에 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평화 의식으로 급격한 아이디어의 변화가 아닌 실천 가능한 분야에서 평화를 추구하되 실용적인 부분을 유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는 중국을 소외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남중국해에서 해양갈등은 항해의 자유뿐 아니라 지역의 주권과도 연관된 것이다. EAS의장 성명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세안의 공세에 중국이 크게 대응을 하지 않거나 원칙적인 수준에서 맞대응을 삼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은 EAS에 계속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실천 사업에 중국이 투자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셋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강국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중국은 해양 협력과 관련하여 잦은 언급이 있었지만, 회의를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러시아는 대통령의 참석이 없었고, 미국의 활동력도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과제를 던져준다. 먼저 아세안의 중심성(ASEAN's Centrality)이 매번 강조되면서 다자협의체의 지도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EAS의 첫 제안은 말레이시아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후 아세안 회원국을 순회하면

서 실천력 강한 사업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재정(금융) 문제가 매년 언급되었지만, 협력을 지향하지는 수준의 슬로건에 그쳤다. 향후 아세안의 중심성이 지속되는 것이 정치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역 협력체로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 러시아, 미국을 아우르는 EAS가 어떤 지역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분명히 아세안 국가들은 자연재해와 해양협력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지만 미국, 러시아 등이 가진 지역의 관심은 또 다른 것이다. 한국은 비핵확산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인권 등 지구의 보편적인 가치가 투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AS의 근간이 되는 쿠알라룸푸르 선언의 6개 우선 사업은 대부분 사업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가치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체성은 사회, 문화적 연대 의식 속에서 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AS 정상회담 의장 성명은 그러한 면이 부족하다. 이는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속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서의 특수성, 문화적 괴리감 등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기술과 통신이 발달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가치의 문제는 토론의 기회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관심을 가진 EAS 회원국들이 다른 지역 협의체와 얼마나 차별적인 회의체로 거듭날 것인가 하는 것은 미래의 숙제다.

부록

〈부록 1〉 2011~16 EAS 의장 성명을 분류 노드와 지시체

Internals		
Name	Nodes	References
9th statement 2014	29	53
8th statement 2013	28	51
7th statement 2012	20	44
6th statement 2011	22	36
11th statement 2016	23	28
10th statement 2015	23	32

〈부록 2〉 통합 노드, 지시체(빈도순)

Nodes		
Name	Sources	References
Natural Disasters	6	24
Human Resources Development	5	15
Non-Traditional Security	6	14
Connectivity	6	13
Health Issue	6	12
Nuclear non-proliferation	6	12
Climate Change	5	11
Promoting Maritime Cooperation	6	10
Financial Cooperation	5	9
Sustainability	5	8
Economic Integration	5	8
Energy Security	5	7
Free Trade	4	7
ASEAN's Centrality	4	7
South China Sea	2	6
Food Security	3	5
Six Priority	4	4
Kuala Lumpur Declaration	4	4
Partnership	3	4
People-to-People	2	4
Korean Peninsula	4	4
ISIL	1	4
Strategic Area of Cooperation	2	3
Training	3	3
Role of the ASEAN Secretariat	3	3
Human Rights	2	3
Regional Security Framework	2	3
RCEP	3	3
G-20	3	3
APEC	3	3
Norms	1	2
Five Priority	2	2
Joint Program	2	2
ASEM	2	2
Syria	2	2
Migrants	2	2
Democracy	1	1

■ 참고문헌 ■

- 도종윤. 2018. “동아시아 평화인식 조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을 통해 본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사와 변화의 추이.” 2018 JPI 공동 과제 참조.
- 손 열. 2006. 제1장 “서문: 지역, 지역주의, 동아시아.” 정용화 외. 『동아시아와 지역주의』. 양평: 지식마당.
- 외교부. “동아시아 정상회의.” http://www.mofa.go.kr/www/wpge/m_3940/contents.do
- 전재성. 2011.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EAI.
- Bisley, Nick, and Malcolm Cook, 2014. How the East Asia Summit Can Achieve its Potential, ISEAS perspective, Singapore, 28 Oct 2014
- C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docs/refmaps.html>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n Government. “East Asia Summit.” <https://dfat.gov.au/international-relations/regional-architecture/eas/Pages/east-asia-summit-eas.aspx>
- EAS Chair’s Statement 2011-16, ASEAN, <https://asean.org/>
- Kuala Lumpur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SEAN Charter. <https://asean.org/asean/asean-charter/kuala-lumpur-declaration/>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The Eighth East Asia Summit 2013.” https://www.mofa.go.jp/region/page3e_000110.html
- Remarks by Prime Minister at the 11th East Asia Summit held on 8 September 2016 in Vientiane, Lao PDR, September 08, 2016.

- <https://mea.gov.in/aseanindia/SpeechStatementEAS.htm?ctl/22610/Remarks+by+Prime+Minister+at+the+11th+East+Asia+Summit+held+on+8+September+2016+in+Vientiane+Lao+PDR>
- Sydney Morning Herald. “Invite China’s army: Jakarta.” November 21, 2011.
- The Guardian. “Obama urges Asian leaders to step back from territorial disputes.” Nov. 20, 2012.
-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ull text of Premier’s speech at the 10th East Asia Summit.” Nov. 25, 2015. http://english.www.gov.cn/premier/speeches/2015/11/25/content_281475241888610.htm
-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

• 국문

본 보고서는 2011~16년까지 EAS의 의장 성명을 분석하여 동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자주의 협력체에서 어떤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지도자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인식을 추출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EAS의 지도자들은 자연재해, 인적자원 개발, 비전통 안보/비핵확산, 연계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해양 안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는 중국을 소외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셋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강국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중국은 해양 협력과 관련하여 잦은 언급이 있었지만, 회의를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는 다시 두 가지 과제를 던져 준다. 먼저 아세안의 중심성(ASEAN's Centrality)이 강조되면서 다자협의체의 지도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향후 아세안의 중심성이 지속되는 것이 정치적 맥락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역 협력체로서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능력이 있는 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풀어야 한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오세아니아, 러시아, 미국을 아우르는 EAS가 어떤 지역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불분명하고, 아세안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은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다양한 관심을 가진 EAS 회원국들이 다른 지역 협의체와 얼마나 다른 정체성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미래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정상회의, 빈도분석, 자연재해, 비전통안보, 기후변화, 해양협력, 인적자원개발

• 영문

This report is to analyze the EAS Chairman's statement from 2011-16 to show what political leaders in East Asia are focusing on in multilateral cooperation. Under the objectives, it will be able to extract the awareness of peace and prosperity of political leaders acros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First, EAS leaders were interested in natural disasters, human resource development, non-traditional security(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nectivity. Second, there is a lot of interest in maritime cooperation, which has turned out to be alienating China. Third, the role of global powers such as the US, Russia, China, and Japan has not been highlighted. China has frequently commented on maritime cooperation, but did not have a meeting-driven initiative. This means two challenges. First, ASEAN's Centrality is over-emphasized, raising questions about the leadership of the multilateral council. While the future of ASEAN centrality may be meaningful in the political context, it remains to be seen as questions to be capable of driving real ideas and projects as a true regional partnership. Another point is that identity question must be solved. Finally, they are little interest in universal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It is still unclear what regional common interests EAS encompasses. ASEAN countries, the US, Russia, China, Japan, and Korea have different interests. How different the EAS member countries with such diverse interests will establish their identity compared with other regional councils will remain a challenge for future.

[Key words] EAS, Frequency analysis, Natural disasters, Non-traditional security, Climate change, Promoting maritime coope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빅 데이터로 살펴본 국가 간 평화관계 분석: 1998년부터 2019년까지 한일관계 사례를 중심으로

손정욱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정량적 방법론과 정성적 방법론 중 어떤 방식이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두고 펼쳐진 이른바 2차 대논쟁(the Second Great Debate)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국제정치학에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은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¹⁾ 예컨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국제정치 논문들의 방법

1) 1966년 볼(Hedley Bull)이 저널 세계정치(*World Politics*)에 국제정치학에서 행태주의적 접근법을 접목시킨 것에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자, 뒤이어 키플란

론을 분석한 관리(Quan Li)에 따르면, 전체 기간 동안 정량적 방법론만 사용한 논문 비율이 34.3%, 정성적 방법론만 사용한 논문 비율이 30.5%로 나타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정량적 분석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²⁾

특히 방대한 규모의 자료와 컴퓨터 기반의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등장하면서 과거 전문가 코딩 하에서는 시도할 수 없던 정량적 연구들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국가 간 평화와 분쟁에 관한 연구에서 컴퓨터 코딩은 전문가 코딩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이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훨씬 월등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³⁾

이러한 학문적 흐름의 연장선에서 본 연구는 최근 구글(google)이 공개한 빅 데이터인 GDELT(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Morton Kaplan)이 같은 저널에 이를 반박하는 논문을 게재했고, 3년 뒤인 1969년에 싱어(David Singer)가 이 논쟁에 가세하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를 “현실주의-이상주의 대논쟁(Realist-Idealist Great Debate)”에 이은 두 번째 대논쟁으로 불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것. Hedley Bull, “International Theory: The Case for a Classical Approach,” *World Politics* 18-3(1966), pp.361-377; Morton Kaplan, “The New Great Debate: Traditionalism vs. Sci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19-1(1966), pp.1-20; David Singer, “The Incomplete Theorist: Insight without Evidence,” in K. Knorr and J. N. Rosenau (eds.), *Contending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p.63-86.

2) Quan Li, “The Second Great Debate Revisited: Explaining the Impact of the Qualitative-Quantitative Divid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1-3(2019), pp.447-476.

3) Gary King and Will Lowe, “An automated information extraction tool for international conflict data with performance as good as human coders: A rare events evaluation desig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3(2004), pp. 617-642.

Tone) 사건 자료를 활용해 국가 간 평화관계를 추적한다. GDELT 사건 자료는 전 세계에서 영문으로 작성된 각종 기사들을 수집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어 그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면, GDELT 사건 자료는 경제적 보복, 군사적 위협, 물리적 공격과 같은 국가 차원의 갈등뿐만 아니라, 인권, 인종차별,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개인 차원의 이슈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GDELT 자료는 무료로 제공되며 매 15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연구자들이 손쉽게 최신 자료를 얻을 수 있다.⁴⁾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정치학에서 GDELT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본 연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목표는 평화연구에 GDELT 자료를 활용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과연 해당 자료가 국가 간 평화관계의 변화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사례 연구로 한일관계를 선택함으로써 양국 간 평화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국면이 언제였는지를 전환점 분석(change point analysis)을 통해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20년간 한일관계를 살펴본 결과, GDELT 자료는 양국 간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특히 전환점 분석에 따르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결정적 국면은 2012년 10월과 2015년 1월로 나타났다. 2012년 10월은 이명박 대통령의 8월 독도방문과 제2기 아베(安倍晋三) 내각이 등장한 12월이 맞물리는 시기로, 이 시기 양국 지도

4) GDELT 자료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http://data.gdelproject.org/events/index.html>

부는 여러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로 민족주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한편, 2015년 1월은 한일 간 사건들을 다뤘던 기사들의 평균적 어조(average tone)의 합계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시기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전쟁이 극렬하게 벌어지던 때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2절에서는 기존 평화 연구들이 어떤 자료들을 통해 국가 간 갈등과 협력을 설명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속에서 GDELT와 같은 빅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평화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추적하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결정적 국면을 분석한다. 4절은 결론이다.

II. 평화 연구와 빅 데이터

1. 평화의 개념과 사건 분류 체계

평화 연구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접근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⁵⁾ 소극적 평화는 전쟁의 부재(absence of war)를 증시한다. 소극적 평화를

5) Kenneth E. Boulding, "Toward a Theory of Peace," in Roger Fisher (eds.), *International Conflict and Behavioural Science: The Craigville Paper* (New York: Basic Books, 1964).

강조하는 학자들은 평화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분석의 명료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평화연구의 상당수는 이러한 소극적 평화 개념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싱어와 스몰(David Singer and Melvin Small)이 개발한 '전쟁에 관한 상관관계(Correlates of War, 이하 COW)'이다. 이들은 '1년 동안 조직된 군사력을 동원하여 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전쟁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1816년부터 1980년까지 전 세계의 평화 양상을 분석했으며,⁶⁾ 그 뒤를 이어 후학들이 현재까지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⁷⁾ 또한 오슬로 평화연구소(PRIO: the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의 톤네손(Stein Tønnesson) 교수 역시 소극적 평화의 입장에서 최근 40여 년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거의 발발하지 않는 평화 상태가 지속되었던 원인을 추적했다.⁸⁾

하지만 소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한 정량 분석들이 평화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냉전 이후 국가 간 물리적 충돌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적극적 평화 개념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전쟁의 부재라는 소극적 평화 개념으로는 탈냉전 시대 복잡한 국제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⁹⁾ 예를 들어, 전쟁의 부재란 북한과 미국처럼 심각한 라

6) Melvin Small and David Singer, *Resort to Arms: International and Civil War, 1816-1980* (New York: Sage, 1982).

7)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은 2010년에 공개한 COW 4.0 버전으로 1816년부터 2007년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Meredith Reid Sarkees and Frank Wayman, *Resort to War: 1816-2007* (Washington D.C.: CQ Press, 2010).

8) Stein Tønnesson, *Explaining the East Asian Peace: A Research Story* (Copenhagen: NIAS Press, 2017).

9) Kristine Höglund and Mimmi Söderberg Kovacs, "Beyond the absence of

이별(severe rivalry)부터 유럽연합 회원국들처럼 안보공동체(security community)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¹⁰⁾ 따라서 21세기 평화연구는 소극적 평화 개념을 넘어서 전쟁의 부재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국가 간 사건들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화와 갈등의 역동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국가 간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정교한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간 평화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사건 분류(event categories) 체계는 맥클러랜드(Charles A. McClelland)가 만든 WEIS(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¹¹⁾와 아자르(Edward E. Azar)가 개발한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¹²⁾이었다. 하지만 두 분류 체계 모두 냉전시대에 개발된 만큼, 개념적으로나 적용성 측면에서 최근 평화 연구의 주요 이슈들인 인종 갈등, 낮은 강도의 폭력, 조직된 범죄 활동, 다자 개입 등과 같은 개념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WEIS는 ‘군사적 관여(military engagement)’ 항목에 단지 하나의 하위개념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험거운 분류 체계로는 국경지역에서 발포된 총성 한 발부터 도심지역에 대한 전략적 폭격에 이르는 광범위한 군사적 관여 행위를 제대로 구분

war: the diversity of peace in post-settlement societ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6 (2010), pp.367-390.

10) Paul F. Diehl, Gary Goertz and Yahve Gallegos, “Peace data: Concepts, measurement, patterns, and research agenda,”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020).

11) Charles A. McClelland, *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WEIS) Codebook* (ICPSR 5211),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Ann Arbor (1976).

12) Edward E. Azar, “The conflict and peace data bank (COPDAB) proje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 (1980), pp.143-152.

하기 힘들다. 또한 COPDAB은 국가 간 수많은 갈등과 협력의 범위를 겨우 16개의 사건들로만 분류하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이런 분류 체계를 처음 만든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미중물(first phase)’ 정도로 봐주기를 바랐지만,¹³⁾ 안타깝게도 지난 40여 년간 후속 연구들은 미미한 정도의 수정만 했을 뿐, 이들의 사건 분류 체계를 큰 비판 없이 활용해왔다. 기존 사건 분류 체계의 큰 틀을 변경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문가 코딩에 기반한 방식의 한계 때문이었다. 기존 분류 체계에 대해 훈련을 받아왔던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 5개에서 10개의 사건들을 분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통해 수만 개의 사건들을 다시 코딩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한계 때문에 WEIS를 업그레이드했던 톰린슨 방식(Tomlinson method)¹⁴⁾이나 COPDAB의 범위를 확장 및 보완했던 GEDS(Global Event Data System) 역시 최소한의 변화를 주는 데 그쳤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 코딩 기법이 활발해지면서 사건 분류 작업에 대한 개선 노력도 보다 활발해졌다. 가장 주목할 분류 체계는 2002년 캔사스 대학의 거너(Deborah J. Gerner)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팀이 만든 CAMEO(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s)이다. CAMEO는 WEIS 분석틀을 그대로 두되, 기존의 분류 체계를 통합하거나 추가하는 한편 하위 개념들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탈냉전 이후 등장한 다양한 갈등과 협력을 담아낼 수 있도록 수정했다. 가장 최근 버전은

13) McClelland(1976), p.177.

14) Rodney G. Tomlinson, “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WEIS) Coding Manual,” Manuscript, United State Naval Academy (1993).

〈표 1〉

CAMEO 사건 유형

사건 번호	사건 유형	하위 범주 개수
01	공언하다(make public statement)	10
02	요청하다(appeal)	27
03	협력할 의도를 표현하다(express intent to cooperate)	28
04	상의하다(consult)	7
05	외교적 협력을 하다(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8
06	물질적 협력을 하다(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5
07	원조를 제공하다(provide aid)	6
08	양보하다(yield)	25
09	조사하다(investigate)	5
10	요구하다(demand)	26
11	불만을 갖다(disapprove)	12
12	거절하다(reject)	26
13	위협하다(threaten)	22
14	항의하다(protest)	26
15	물리력을 과시하다(exhibit force posture)	5
16	관계를 줄이다(reduce relations)	13
17	강요하다(coerce)	12
18	공격하다(assault)	13
19	싸우다(fight)	7
20	비전통적 방식의 대규모 폭력을 자행하다 (use unconventional mass violence)	7

출처: Schrodtt(2012)

2012년에 발표된 것으로 〈표 1〉과 같이 20개의 사건들을 큰 틀로 하여 총 290개의 하위 개념들로 국가 간 사건들을 세분화했다.¹⁵⁾

15) Philip A. Schrodtt, *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 (CAMEO) Event*

2. GDELT 사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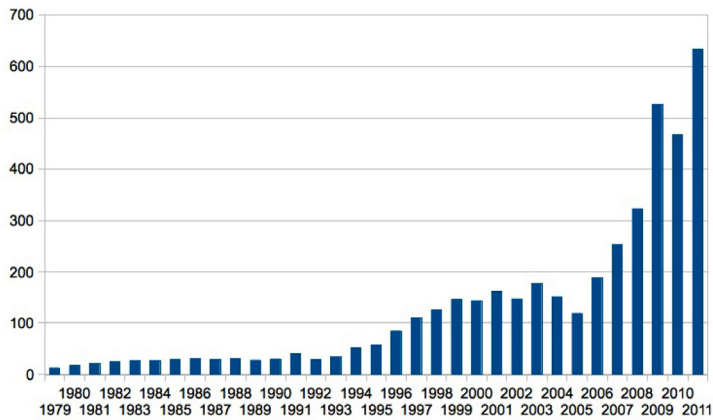
기존 WEIS와 COPDAB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CAMEO가 등장한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GDELT 1.0 Event Database 역시 CAMEO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 자료는 1979년 1월 1일부터 생성된 전 세계 사건이 25억 개 이상 담겨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다. GDELT 사건 자료는 구글에서 검색 가능한 전 세계 기사를 기반으로 한다. 즉, 세계 곳곳에 지부를 두고 있는 거대 미디어 그룹들의 기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사들 중에 구글 뉴스(Google News)에 공개되는 모든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은 1979년부터 2011년까지 GDELT 사건 자료들의 연도별 용량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20년 사이에 국제뉴스 환경의 변화와 웹을 통한 뉴스 제공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기사들의 분량 자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억 개가 넘는 기사들을 전문가 코딩을 통해 분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GDELT는 TABARI(Textual Analysis by Augmented Replacement Instructions) 프로그램을 통해 기사들을 자동으로 분석한 후, 위에서 언급한 CAMEO 분류 체계에 따라 내용을 저장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사의 문장에서 행위자와 동사를 구분해서 저장한다. 예를 들면, “South Korea Soldiers”라는 단어는 자동으로 ROKMIL 코드로 변경되어 저장되며, “The Foreign Minister of South Korea”는 ROKGOV

and Actor Codebook (2012). <http://data.gdelproject.org/documentation/CAMEO.Manual.1.1b3.pdf>(검색일: 2019.11.10). 한편, CAMEO의 상세한 분류 체계는 별첨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GDELT 사건 용량 분포(Mb/년)



출처: Kalev Leetaru and Philip A. Schrodt, *GDELT: 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s, and Tone, 1979-2012* (2013), <http://data.gdeltproject.org/documentation/ISA>, 2013. GDELT.pdf(검색일: 2019.11.10), p.3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한 문장에서 두 명의 행위자가 등장했을 때, 문장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행위자를 구분한다. 예컨대, “Japan imposed broad new trade restrictions on South Korea on Friday morning(지난 금요일 일본이 한국에 대해 광범위한 새로운 무역 제재를 부과했다)”라는 기사의 경우, TABARI는 Japan을 행위자1(Actor1CountryCode) 항목에 배치하고, South Korea를 행위자2(Actor2CountryCode) 항목에 배치함으로써 국가 간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의 방향성을 포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렇게 분류된 내용을 기반으로 GDELT는 각 기사의 어조(tone)를 측정한다는 점이다. 즉, 슈크(Eric Shook) 등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해당 기사의 뉘앙스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구분해 이를 수치화한 것이다.¹⁶⁾ 이러한 분석 기법은 국가 간 관계 변화를

추적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수많은 기사들의 어조를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협력 혹은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으리란 것이다.¹⁷⁾ 다음 절에서는 GDELT 사건 자료가 제시하는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III. 한일 평화관계 분석: 1998년부터 2019년까지

1. 한일 평화관계 양상

1) 사건 규모(event volume)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그리고 일본에서

16) Eric Shook, Kalev Leetaru, Guofeng Cao, Anand Padmanabhan and Shaowen Wang, “Happy or not: Generating topic-based emotional heatmaps for culturomics using CyberGIS,” IEE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Science, Chicago, IL, United State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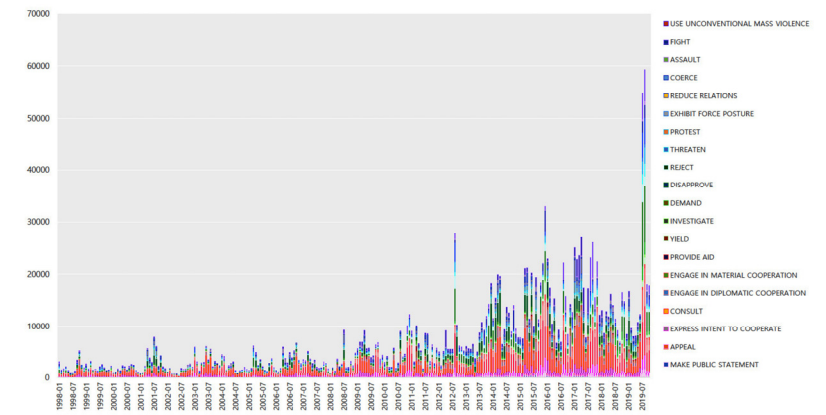
17) 이 밖에도 GDELT 사건 자료는 CAMEO 사건 유형을 수치화한 이른바 골드스타인 지표(Goldstein Scale)도 함께 제공한다. 이 지표는 각 사건 유형의 특성을 기반으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의 숫자를 배정한 것이다. 예컨대, ‘전통적인 방식의 군사력을 사용한 사건(use conventional military force)’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을 부과하는 반면, ‘군사적으로 후퇴하거나 항복한 사건(retreat or surrender militarily)’에 대해서는 플러스 10을 책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CAMEO가 분류한 290개의 사건 세부 유형별로 점수를 부과한 것이 바로 골드스타인 지표다.

는 오부치(小渊惠三) 정부가 등장한 1998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 10월까지이다. 두 정부가 등장했던 1998년은 양국 정부가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할 정도로 황금기를 가졌던 시기이다. 이 선언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과거사 문제에 처음으로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공식 문서에 명문화했고, 한국은 전후 민주주의와 평화 증진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적극 평가해주었다.¹⁸⁾ 따라서 본 연구는 한일관계가 가장 좋았던 1998년을 분석의 시발점으로 삼고, 이 후 양국관계가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그리고 특히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시기와 사건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해당 기간 동안 GDELT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심 행위자로 등장한 사건들은 총 1,858,639건이며, 이를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20년 동안 한 달에 3만 건 이상의 사건 기사들이 집중됐던 시기는 2015년 12월(32,958건), 2019년 7월(54,815건), 그리고 2019년 8월(59,303건) 등 세 차례다. 2015년 12월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 최종 합의를 맺은 시점이다. 미국의 압력 하에서 진행되었던 한일 간 위안부 문제는 거의 일 년 이상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만큼, 12월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많은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발표 직후 많은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특히 다른 이슈들에 비해 위안부 문제는

18) 물론 1995년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담은 공식 문서인 '무라야마(村山) 담화'가 있지만, 그 대상이 한국을 특정하기보다는 아시아 국가들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차이가 있다.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그림 2> 한일 간 전체 사건량 변화 추이(1998-2019)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지만, 이 후 양국 정부에 의해서 더욱 증폭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2014년부터는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치열한 공공외교전쟁을 펼쳤다.¹⁹⁾ 이런 배경 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정부가 최종 합의를 공동 발표했던 2015년 12월에 사건 기사가 급증했던 것이다.

2019년 7월과 8월에는 양국 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기간을 압도할 만큼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 불화

19) 손열,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학-군안보학-군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국제정치논총』 제58집 2호(2018), pp.145-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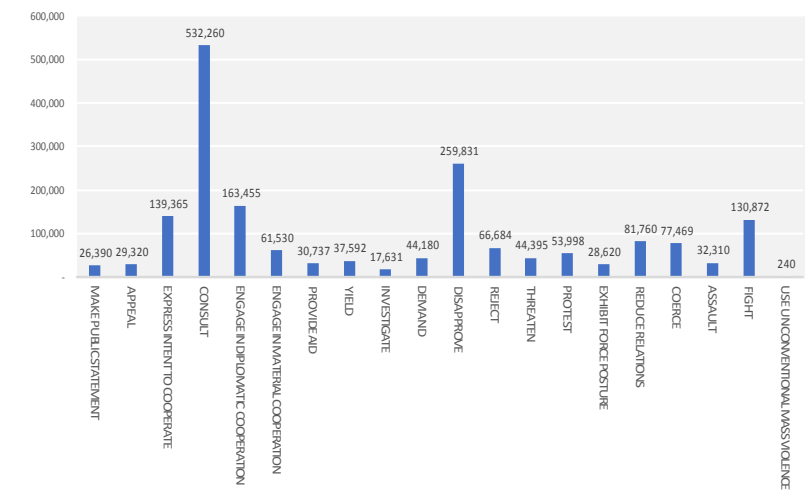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8월 28일에는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7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같은 달 25일과 26일에는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 시기 한일 양국 간 갈등 국면은 극에 달했다.

이 밖에도 사건량이 거의 3만 건에 육박한 기간은 2012년 8월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0일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 방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펼쳤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노다 총리의 친서를 되돌려 보내면서 양국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됐다.

또한 <그림 2>는 한일 간 월별 기사들을 CAMEO 사건 유형에 따라 총 20개의 항목으로 분류해서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사건량이 가장 많았던 2019년 8월의 경우,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불만(disapprove)’으로 전체 사건 중 18%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상의(consult)’ 15.8%, ‘싸움(fight)’ 10.2%, ‘관계 축소(reduce relations)’ 8.6%, 그리고 ‘외교적 협력(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7.5%순이었다.

<그림 3>은 전체 분석 기간 동안 한일관계를 다뤘던 기사들을 CAMEO 사건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의(consult)’ 유형으로 전체 사건 중 28.6%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은 ‘불만(disapprove)’ 14.0%, ‘외교적 협력(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8.8%, ‘협력 의지(express intent to cooperate)’ 7.5%, ‘싸움(fight)’ 7.0%순이다. 반대로 가장 빈도가 낮았던 유형인 ‘비전통적 대규모 폭력(use unconventional mass violence)’은 전체 사건

<그림 3> 사건 유형별 한일 간 사건 분포(199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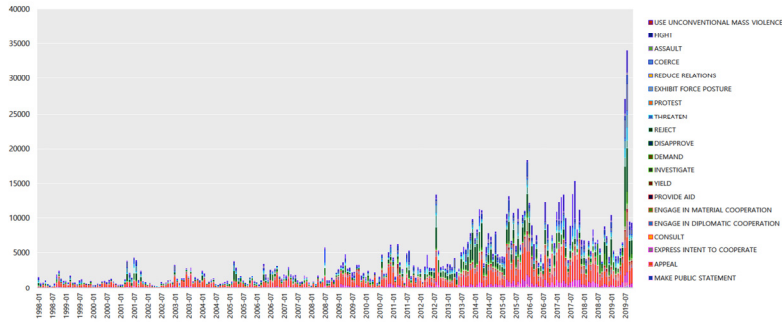
대비 0.01%에 불과했고, 뒤를 이어 ‘조사(investigate)’ 0.9%, ‘공언(make public statement)’ 1.4%, ‘물리력 과시(exhibit force posture)’ 1.5%순으로 나타났다.

GDELT 사건 자료는 행위의 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만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반대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그림 4>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양국의 입장을 각각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시기별 사건량은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2019년 8월과 9월에 전체 사건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한일 간 발생한 사건들은 일방적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상호 간에 갈등과 협력이 교차해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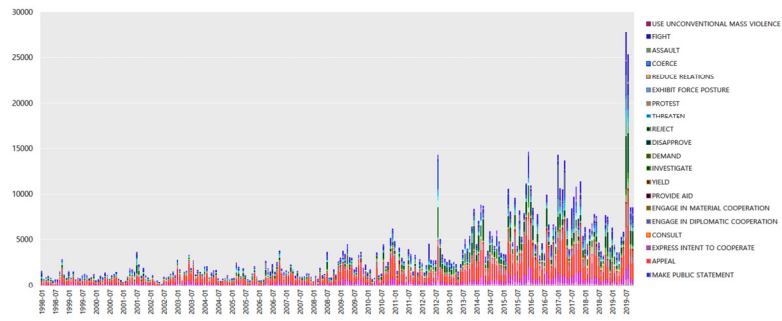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한 시기에도 두 국가의 대응

〈그림 4〉 상대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건량 변화 추이(1998~2019)

〈그림 4-1〉 일본에 대한 한국의 사건량 변화



〈그림 4-2〉 한국에 대한 일본의 사건량 변화



에 차이가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한일 양국 간 무역분쟁과 지소미아 파기 등이 맞물렸던 2019년 7월과 8월을 살펴보자. 우선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8월에 가장 많은 사건량을 기록한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사건량은 7월에 가장 많았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두 국가 모두 ‘불만(disapprove)’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을 ‘상의(consult)’ 유형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뒤를 이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관계 축소(reduce relations)’, ‘싸움(f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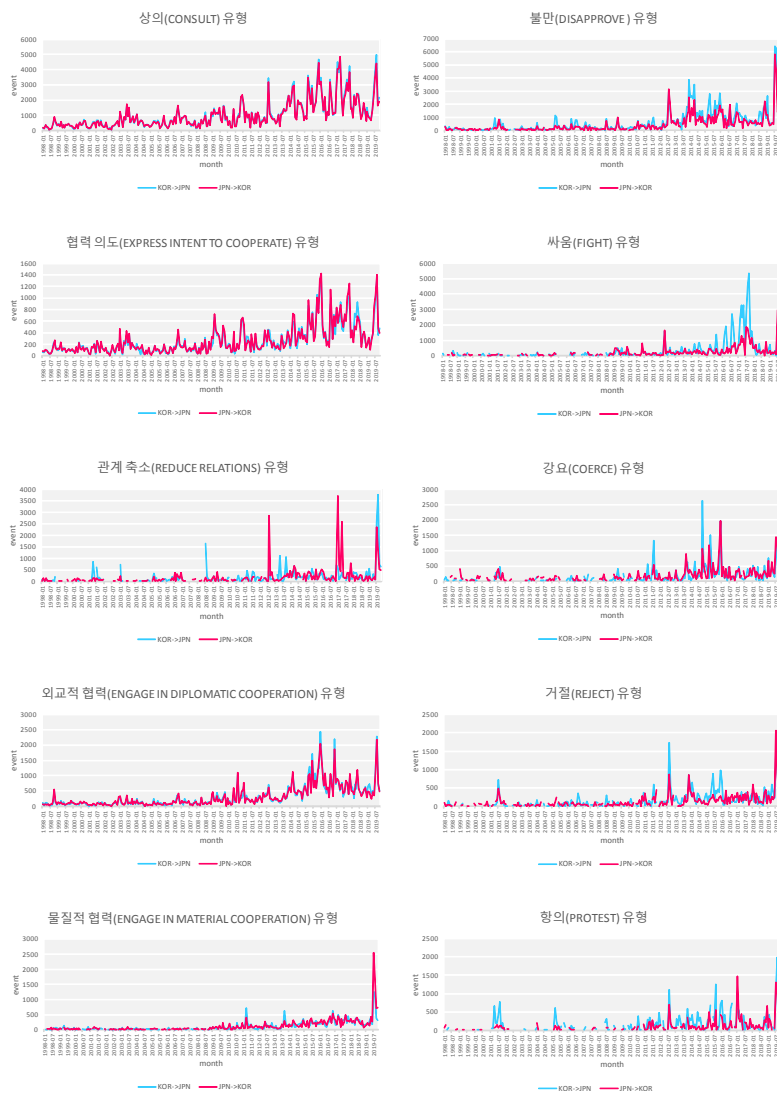
〈표 2〉 한일 양국 간 사건 유형 비교(2019.07~08)

사건 유형	한국 → 일본	일본 → 한국
공언(make public statement)	487	253
요청(appeal)	458	410
협력 의도(express intent to cooperate)	1338	1041
상의(consult)	4980	3460
외교적 협력(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2285	1110
물질적 협력(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1254	2556
원조 제공(provide aid)	504	343
양보(yield)	640	568
조사(investigate)	171	216
요구(demand)	1690	570
불만(disapprove)	6292	5841
거절(reject)	1104	2064
위협(threaten)	1781	767
항의(protest)	1988	1302
물리적 과시(exhibit force posture)	480	345
관계 축소(reduce relations)	3744	2336
강요(coerce)	1275	1428
공격(assault)	468	126
싸움(fight)	3040	2983
비전통적 대규모 폭력(use unconventional mass violence)	-	-

‘외교적 협력(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항의(protest)’, ‘위협(threaten)’순이었던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싸움(fight)’, ‘물질적 협력(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관계 축소(reduce relations)’, ‘거절(reject)’, ‘강요(coerce)’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한일 양국 간 유형별 사건량 변화 흐름(1998~2019)



한편, 양국 간 사건 유형 비교를 전체 기간으로 확장해보면 어떤 형태를 보일까? 지면의 한계상 사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의 유형만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가장 많은 사건이 밀집되어 있는 ‘상의 (consult)’ 유형을 비롯해 ‘협력 의도(express intent to cooperate)’ 유형, ‘외교적 협력(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유형, ‘물질적 협력(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유형 등과 같은 사건들은 한국과 일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사한 규모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불만 (disapprove)’ 유형과 ‘거절(reject)’ 유형은 전반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항의(protest)’ 유형은 2016년까지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았으나,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는 반대로 일본이 더 높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싸움(fight)’ 유형은 2008년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 점차 증가해 2013년부터는 유독 일본보다 한국에서 높게 형성되었으며, 그 규모가 2017년 상반기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관계 축소(reduce relations)’ 유형의 경우, 특정 시기에 산발적으로 일본에서 매우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유형의 규모 변화만으로 양국 간의 평화관계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 규모는 당시 사건에 대한 두 국가의 관심 정도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두 국가를 다룬 기사가 ‘협력 의도 (express intent to cooperate)’ 유형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사의 문맥에 따라 해당 기사는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GDELT 사건 자료를 통해 국가 간 평화관계 양상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건의 규모뿐만 아니라 문맥에 담겨 있는 어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사건 어조(event tone)

GDELT는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들을 분석해 평균적 어조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에 따라 최저 -100에서 최대 100 사이의 점수를 부과한다. 마이너스는 부정적인 어조를 뜻하며, 플러스는 긍정적인 어조를 나타낸다. 0은 중립적인 입장이다. 예를 들어 ‘폭동(riot)’이라는 사건에 대한 평균적 어조가 마이너스일 경우, 폭동 발생으로 인해 여러 피해들이 발생했다든가 폭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폭동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숫자가 커질수록 그 피해 규모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폭동 사건의 평균적 어조가 플러스라는 것은 하루 평균 공격 횟수가 줄어들었다거나 더 이상 공격을 해도 되지 않을 만큼, 상황이 호전되는 상황처럼 해당 사건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Leetaru and Schrodt 2013, 46).

〈그림 6〉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사건들의 평균적 어조의 합계를 보여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2015년 2월을 기준으로

평균 어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 한일관계를 다룬 기사들의 어조는 증감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플러스 범위 내에서 움직였던 반면, 2015년 2월 이후에는 단 한 차례의 예외 없이 평균 어조가 마이너스 범위에 머물러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에 강력한 여론전을 펼치던 시기였다. 2014년 3월 열린 헤이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국장급 회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중재에 나섰다. 이후 한일 양국은 2014년 4월 16일 1차 국장급 협의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 28일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때까지 총 12차례 협의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로부터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국내외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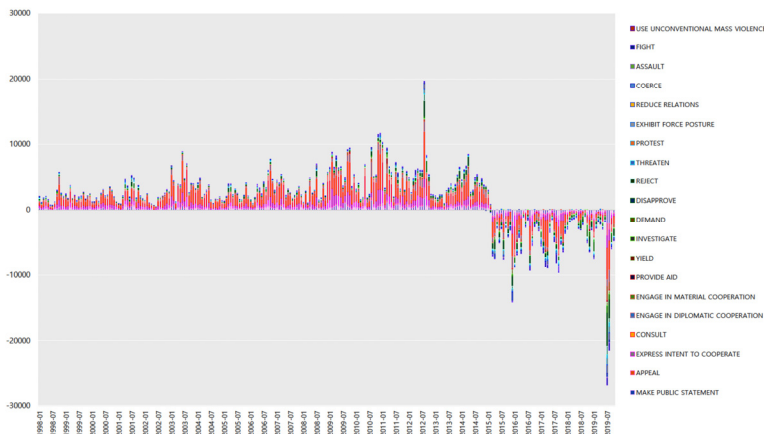
특히 아베 정부는 ‘사죄피로 현상’ 여론을 조성해 협상력을 높이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간 나오토 담화(2010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계속 말을 바꿔가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해외 순방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역사인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없는 협상은 없다는 여론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인 소녀상 건립 및 철거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처럼 양국 간의 위안부 문제가 미국의 개입 등으로 국제적 이슈로 번져나가면서 이 시기 한국과 일본을 다루는 전 세계 기사들의 부정적 어조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지점은 2019년 7월과 8월에 부

〈그림 6〉

한일 간 사건들의 평균적 어조 분포(199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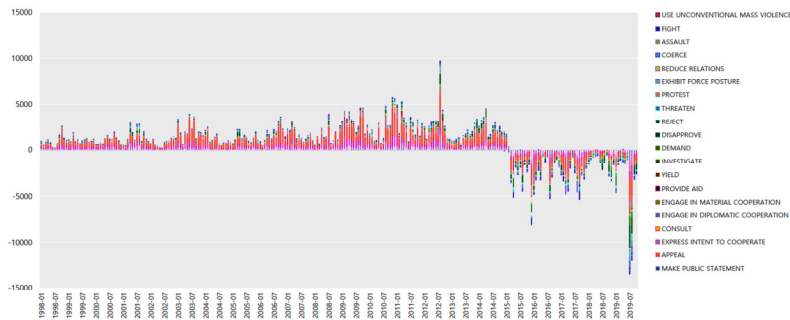


정적 어조의 기사들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는 한일 간 무역 분쟁과 지소미아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전체 분석 기간 중에 사건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는데, 평균적 어조에 있어서도 부정적 발언이 가장 높았다. 그만큼 한일관계 악화가 가장 극명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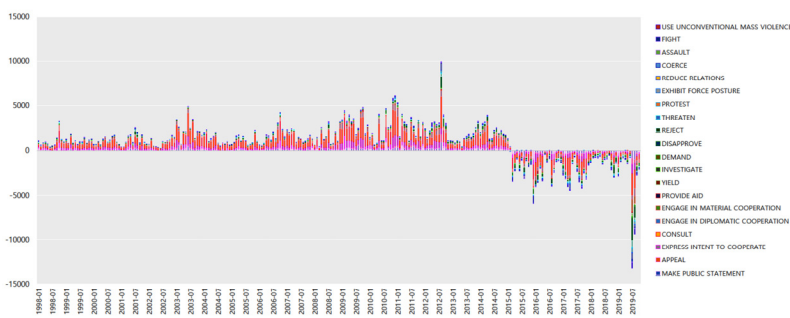
〈그림 7〉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각각의 어조 변화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어조의 변화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가

〈그림 7〉 상대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건 어조 변화 추이(1998~2019)

〈그림 7-1〉 일본에 대한 한국의 사건 어조 변화



〈그림 7-2〉 한국에 대한 일본의 사건 어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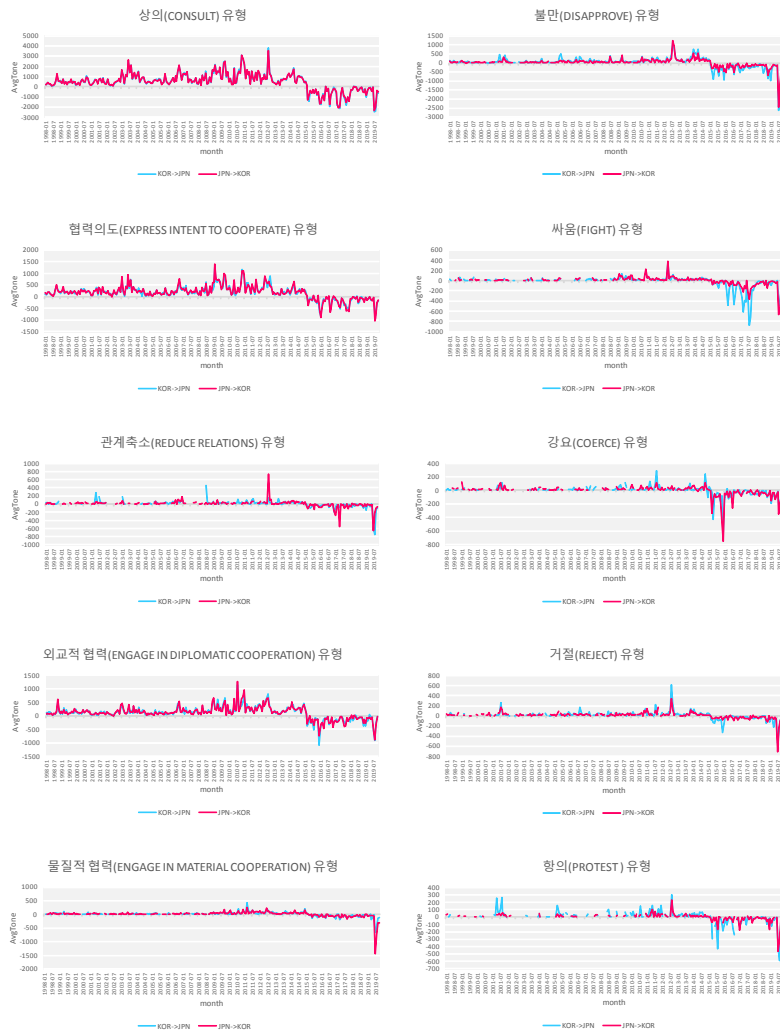


지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 어조로 변경되는 시점과 관련해 일본보다 한국의 반응이 좀 더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사건 어조는 2015년 1월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내려간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사건 어조는 그보다 한 달 뒤인 2월부턴 부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에 대한 한국의 사건 어조는 2019년 7월에 부정적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사건 어조는 그보다 한 달 뒤인 8월에 가장 높았다. 한편, 2015년 이후 나타난 부정적 어조는 일본에 대한 한국의 사건 어조(평균값: -2,902)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사건 어조(평균값: -2,301)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비판의 수위 측면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어조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사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항목들의 평균적 어조의 변화는 〈그림 8〉과 같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반적인 어조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만, 특정 시기에 따라, 그리고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우선 ‘싸움’ 항목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어조가 2015년 중반 이후부터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응보다 훨씬 부정적인 정도가 높아졌고, 이런 추세는 2017년 말에 극대화된 이후에 빠르게 줄어들었다. 반면, 2019년 6월과 7월에는 싸움 항목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한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물질적 협력’과 ‘거절’ 항목의 경우, 분석 기간 내내 거의 중립적인 어조의 기사들이 지배적으로 많았으나,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격렬하게 진행됐던 2019년 6월과 7월에 부정적 방향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 시기 일본에 대한 한국의 어조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어조가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8〉

한일 양국 간 유형별 사건 어조 변화 흐름(1998~2019)



2. 전환점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DELT 사건 자료는 한일관계의 역동적인 변화 양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번 절에서는 한일 간 관계를 악화시켰던 결정적 국면이 언제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정치학자인 피어슨(Paul Pierson)에 따르면,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관계 변화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⁰⁾

첫째, 축적 원인(cumulative cause)이다. 실제로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변수의 변화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계열적인 큰 흐름이 아닌 짧은 특정 시기를 조사하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진적 변수들을 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임계치 효과(threshold effect)이다. 상호 연관되어 있는 점진적인 사회적 과정은 결정적 사건 발생을 무르익게 하는 조건을 만든다. 즉,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련 행위자들의 관계 속에서 사건 발생의 원인이 잠재적으로 축적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특정한 계기를 통해 그것이 분출되는 경우다.

셋째,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chains)다. 이는 종종 결정적인 정치적 선택과 그것의 결과 사이에 시간단절(time lag)이 존재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예컨대, 정부가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후에 해당 정책의 효과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나타나는 경우, 시간적 단절이

20) Paul Pierson, "Big, Slow-Moving, and ... Invisible — Macrosocial Processes in the Study of Comparative Politics," in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길수록 두 변수 사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변수 간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혹은 경험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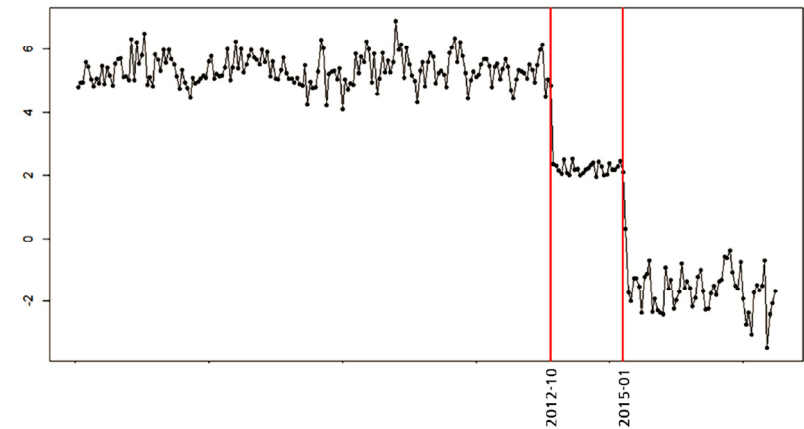
이처럼 사회적 변화, 또는 국가 간 관계 변화는 대부분 오랜 기간의 변화 과정을 점진적으로 거쳐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단기적 원인과 단기적 결과 변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정성적 연구를 중시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은 장기간의 걸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비교역사분석 등과 같은 정성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비판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정성적 분석은 전환점 분석을 통해 이러한 비판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전환점은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질적 개념이다. 즉 전환점 분석은 ‘인과관계의 시간적 맥락의존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도구’인 것이다.²¹⁾

〈그림 9〉는 한일 간 사건 어조를 기반으로 한 전환점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두 번의 전환점이 관측된다. 첫 번째 전환점은 2012년 10월로 평균 4에서 6점대를 유지하던 한일관계 사건 어조가 이 시기를 전후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 시기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정치에서 상대국을 자극해 민족주의 감정을 극대화했던 기간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1) 박종희, “페이지안 사회과학 방법론이란 무엇인가,” 『평화연구』 제22집 1호 (2014).

〈그림 9〉

한일관계 사건 어조 평균값과 전환점 분석(1998~2019)



독도를 방문했고, 14일에는 일왕이 방한하려면 독립운동 유공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격렬해졌다. 일본의 반발과 달리, 당시 국내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70% 이상이 “잘한 행동”이라고 지지를 보냈으며, 임기 말 20%대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이 시기 8% 포인트 급증했다.²²⁾

한편 이 시기 일본은 아베를 중심으로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였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아베는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자위권 확보를 기치로 내세우며 등장했고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승리를 거뒀다.²³⁾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아베는 10월부터 시작된 중의원 선거운동

22) 한국갤럽 2012년 8월 여론조사.

23) 실제로 선거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당내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가 급부상 중이었고, 당내 중진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도 출마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베에게 불리한 구도였다. 9월 26일 본 투표에서 이시

기간 동안 우경화,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에 기반한 민족주의를 강조했고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분열된 민주당을 대상으로 압승을 거뒀다. 실제로 2012년 가을부터 일본사회에서는 변화가인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에서 재특회(在特会,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에 의한 ‘재일교포 혐오연설’이 일상화되는 등 공개적으로 민족주의에 입각한 인종차별주의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²⁴⁾ 이처럼 첫 번째 전환점인 2012년 10월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내정치를 주도했던 정치 세력들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극대화됐고, 결국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일관계를 다루는 기사들의 어조가 큰 폭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두 번째 전환점은 2015년 1월이다. 이 시기는 앞서 전체 어조의 합계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뤘듯이 한일관계를 다룬 기사들 어조의 총합계가 처음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경되었던 시기였는데, 어조의 평균적 변동폭 측면에서도 매우 결정적인 국면으로 나타났다. 2012년 10월 이후 한일 간 평균 어조값은 대략 2 정도를 유지했지만, 2015년 1월 이후 급격히 추락해 그 이후로는 평균적으로 -2를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형국으로 전환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미국의 개입으로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력 하에 양국 정부가 사실상 마감 기한을 정해두고

바 시게루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아베는 결선 투표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사임했던 총리가 다시 선출된 것은 자민당 역사상 처음이었고, 결선 투표에서 역전된 경우는 1956년 12월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이후 두 번째였다. 日本經濟新聞, “自民総裁に安倍氏 決選で石破氏を逆転(永田町ライブ)”(2012),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K2601D_W2A920C1000000/(검색일: 2019.11.30).
 24) 박철희, “일본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제6집 1호(2014), pp.481-529.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려고 하면서 자국에서 유리한 방향의 여론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하던 기간이었다. 특히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기대했던 양국 정부의 바람과 달리, 피해자와의 사전 교감 및 컨센서스 확보 노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소녀상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합의 이후 오히려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²⁵⁾

한편,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여파로 사건량과 부정적 어조의 총량 측면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던 2019년 7월과 8월의 경우,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이후 8월부터 다시 기존의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국면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요컨대, GDELT의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환점 분석에 따르면, 한일관계 악화의 큰 변곡점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거부 등으로 폭발한 최근의 사태라기 보다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일관계는 이미 2012년 10월을 분기점으로 급격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이런 추세가 2015년 1월에 더욱 심화되었던 것이다.

사실 한일 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문가들에게 이런 결과는 심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이기도 했다. 예컨대, 지난 11월 18일 제주평화연구원과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는 “최근 무역 분쟁을 분기점으로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일관계가 결정적으로 어긋난 중요한 분기점은 2012년부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2010년대 이후 일본에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25) 손열(2018).

들이 급증하고 한일 간 경제교류도 별다른 위축 없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었다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한국과 일본사회 저변에 흐르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2012년부터 크게 증가해왔음을 느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광 지표나 경제 지표, 혹은 여론 조사를 통해 양국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됐음을 포착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정적 변화의 맥락을 가시적으로 포착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빅 데이터를 통해 한일관계의 역사적 사건들을 추적한 본 연구는 2019년 이전에 이미 한일관계가 부정적 단계로 진입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IV. 결론

21세기 국제정치에서 한일관계만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동학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한일관계는 국내 정치세력들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역사적 갈등이 더욱 증폭된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과 북핵 문제가 충돌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국제정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9년은 한국과 일본의 갈등 관계가 어느 때보다 격렬했다.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 보상이라는 역사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의 씨앗이 백색국가 배제라는 경제 문제로 연결되었고, 이후 지소미아 연장 거부라는 한미일 군사안보 영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한일 갈등이 국내 정치와 국제정치 전방으로 확산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와 행위자들

이 영향을 주고받는 만큼, 한일관계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사건들을 나열하거나, 전문가에 의한 정권별 정책 평가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한일관계를 정성적으로 분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최근 구글이 공개한 빅 데이터(GDELТ)를 활용해 지난 20년간 한국과 일본 간의 평화관계를 살펴봤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구글의 사건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추적해 본 결과, 주요 사건이 발생했던 국면마다 GDELТ 사건 자료들은 그에 적합한 변화를 감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량 측면에서 보면, 한일관계를 다뤘던 기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정부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던 2015년 12월과 무역분쟁 국면이었던 2019년 7월과 8월이었다. 특히 사건량이 가장 많았던 8월의 경우, 전체 사건 유형 중 ‘불만(disapprove)’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시기 일본보다 한국에서 특히 높았던 유형은 ‘공격(assault)’ 유형이었다.

둘째, 사건 어조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2015년 2월을 분기점으로 한국과 일본을 다룬 기사들의 평균 어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를 분기점으로 한일관계를 다룬 기사들은 줄곧 마이너스 영역 내에서 증감을 반복했다. 또한 2019년 무역분쟁 국면에서 부정적 어조는 다른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2019년 무역 분쟁은 사건량뿐만 아니라 사건 어조 측면에서도 가장 격렬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전환점 분석에 따르면, 한일관계에 큰 변화가 있던 시기는 총 두 번이었다. 최근 한일 간 무역 분쟁과 외교안보 갈등을 겪으면서 그간

증가 추세였던 일본 방문객 수가 급감하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현상 등을 근거로 2019년을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전환기로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본 연구의 전환점 분석 결과, 한일 평화관계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2기 아베 내각 출범이 맞물리는 2012년 10월을 분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됐으며, 이 후 위안부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격렬한 외교전을 펼치던 2015년 1월에 그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되면서 언제라도 양국 간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일본 방문객이 급증하고 일본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던 이면에는 정반대의 부정적 기류가 함께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본 보고서는 평화연구에 대한 GDELT 사건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 시론적 연구이다. 향후 GDELT 사건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는 한편, 국가 간 관계를 추적하는 보다 정교한 방법론을 결합시킴으로써 평화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한 정책적 함의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별첨〉 CAMEO 사건 코드 (CAMEO EVENT CODES)

01 : 공언하다 (MAKE PUBLIC STATEMENT)

- 010 : 공언하다 (Make statement, not specified below)
- 011 : 언급을 거절하다 (decline comment)
- 012 : 비관적인 언급을 하다 (Make pessimistic comment)
- 013 : 긍정적인 언급을 하다 (Make optimistic comment)
- 014 : 정책 옵션을 고려하다 (Consider policy option)
- 015 : 책임을 인정하다 (Acknowledge or claim responsibility)
- 016 : 책임을 부인하다 (Deny responsibility)
- 017 : 상징적인 행동을 하다(Engage in symbolic act)
- 018 : 공감하는 언급을 하다 (Make empathetic comment)
- 019 : 동의를 표시하다 (Express accord)

02 : 요청하다 (APPEAL)

- 020 : 요청이나 요구를 하다 (Make an appeal or request, not specified below)
- 021 : 물질적 협력을 요청하다. (Appeal for material cooperation, not specified below)
 - 0211 : 경제적인 협력을 요청하다 (Appeal for economic cooperation)
 - 0212 : 군사적 협력을 요청하다 (Appeal for military cooperation)
 - 0213 : 사법 공조를 요청하다 (Appeal for judicial cooperation)
 - 0214 : 정보를 요청하다 (Appeal for intelligence)
- 022 : (정책적 지지와 같은) 외교적 협력을 요청하다 (Appeal for diplomatic cooperation (such as policy support))
- 023 : 원조를 요청하다. (Appeal for aid, not specified below)
 - 0231 :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다 (Appeal for economic aid)
 - 0232 : 군사적인 원조를 요청하다 (Appeal for military aid)

- 0233 : 인도주의적 원조를 요청하다 (Appeal for humanitarian aid)
- 0234 : 군사적 보호나 평화 유지를 요청하다 (Appeal for military protection or peacekeeping)
- 024 : 정치적 개혁을 요청하다 (Appeal for political reform, not specified below)
 - 0241 : 리더십의 변화를 요청하다 (Appeal for change in leadership)
 - 0242 : 정책적 변화를 요청하다 (Appeal for policy change)
 - 0243 : 권리를 요청하다 (Appeal for rights)
 - 0244 : 제도, 정권의 변화를 요청하다 (Appeal for change in institutions, regime)
- 025 : 양보하기를 요청하다 (Appeal to yield, not specified below)
 - 0251 : 행정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다 (Appeal for easing of administrative sanctions)
 - 0252 : 정치적 반대 의견 완화를 요청하다 (Appeal for easing of political dissent)
 - 0253 : 인이나 재산 압류 해제를 요청하다 (Appeal for release of persons or property)
 - 0254 : 경제적 규제, 보이콧, 금수 조치 완화를 요청하다 (Appeal for easing economic sanctions, boycott, or embargo)
 - 0255 : (중재가 아닌) 국제적 개입 허용을 요청하다 (Appeal for target to allow international involvement (non-mediation))
 - 0256 : 군사적 개입의 단계적 감축을 요청하다 (Appeal for de-escalation of military engagement)
- 026 : 만나고 협상할 것을 요청하다 (Appeal to others to meet or negotiate)
- 027 : 분쟁 해결을 요청하다 (Appeal to others to settle dispute)
- 028 : 조정하거나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다 (Appeal to engage in or accept mediation)

03 : 협력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COOPERATE)

- 030 : 협력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cooperate, not specified below)
- 031 : 물질적 협력을 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not specified below)
 - 0311 : 경제적으로 협력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cooperate economically)

- 0312 : 군사적으로 협력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cooperate militarily)
- 0313 : 사법적 문제에 협력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cooperate on judicial matters)
- 0314 : 정보 교류에 협력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cooperate on intelligence)
- 032 : (정책적 지지와 같은) 외교적 협력을 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such as policy support))
- 033 : 물질적 원조를 제공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provide material aid, not specified below)
 - 0331 :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provide economic aid)
 - 0332 :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provide military aid)
 - 0333 :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provide humanitarian aid)
 - 0334 : 군사적 보호나 평화유지를 제공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provide military protection or peacekeeping)
- 034 : 정치적 개혁을 도입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institute political reform, not specified below)
 - 0341 : 리더십을 변화시킬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change leadership)
 - 0342 : 정책을 변화시킬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change policy)
 - 0343 : 권리를 요청하다 (Appeal for rights)
 - 0344 : 제도, 정권의 변화를 요청하다 (Appeal for change in institutions, regime)
- 035 : 양보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yield, not specified below)
 - 0351 : 행정적 규제 완화를 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ease administrative sanctions)
 - 0352 : 대중의 반대를 완화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ease popular dissent)
 - 0353 : 인이나 재산 압류를 해제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release persons or property)

0354 : 경제적 제재, 보이콧, 금수 조치를 완화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ease economic sanctions, boycott, or embargo)

0355 : (중재가 아닌) 국제적 개입을 허용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allow international involvement (non-mediation))

0356 : 군사적 개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de-escalate military engagement)

036 : 만나거나 협상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meet or negotiate)

037 : 분쟁을 조정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settle dispute)

038 : 조정을 받아드릴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accept mediation)

039 : 조정할 의도를 표현하다 (Express intent to mediate)

04: 상의하다 (CONSULT)

040 : 상의하다 (Consult, not specified below)

041 : 전화로 상의하다 (Discuss by telephone)

042 : 방문하다 (Make a visit)

043 : 방문을 주최하다 (Host a visit)

044 : 제 3의 장소에서 만나다 (Meet at a "third" location)

045 : 조정하다 (Mediate)

046 : 협상하다 (Engage in negotiation)

05: 외교적 협력을 하다 (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050 : 외교적 협력을 하다 (Engage in diplomatic cooperation, not specified below)

051 : 칭찬하거나 지지하다 (Praise or endorse)

052 : 말로써 옹호하다 (Defend verbally)

053 : 대표하여 지지를 모으다 (Rally support on behalf of)

054 : 외교적으로 승인하다 (Grant diplomatic recognition)

055 : 사과하다 (Apologize)

056 : 용서하다 (Forgive)

057 : 공식적인 합의서에 서명하다 (Sign formal agreement)

06 : 물리적 협력을 하다 (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060 : 물리적 협력을 하다 (Engage in material cooperation, not specified below)

061 : 경제적으로 협력하다 (Cooperate economically)

062 : 군사적으로 협력하다 (Cooperate militarily)

063 : 사법 공조를 하다 (Engage in judicial cooperation)

064 : 정보를 공유하다 (Share intelligence or information)

07 : 원조를 제공하다 (PROVIDE AID)

070 : 원조를 제공하다 (Provide aid, not specified below)

071 :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다 (Provide economic aid)

072 :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다 (Provide military aid)

073 :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다 (Provide humanitarian aid)

074 : 군사적 보호나 평화유지를 제공하다 (Provide military protection or peacekeeping)

075 : 망명을 승인하다 (Grant asylum)

08 : 양보하다 (YIELD)

080 : 양보하다 (Yield, not specified below)

081 : 행정적 제재를 완화하다 (Ease administrative sanctions, not specified below)

0811 :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다 (Ease restrictions on political freedoms)

0812 :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금지를 완화하다 (Ease ban on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0813 : 통행금지령을 완화하다 (Ease curfew)

0814 : 긴급사태나 계엄령을 완화하다 (Ease state of emergency or martial law)

082 : 정치적 반대를 완화하다 (Ease political dissent)

083 : 정치적 개혁에 대한 요청과 요구에 응하다 (Accede to requests or demands for political reform, not specified below)

0831 : 리더십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다 (Accede to demands for change)

in leadership)

0832 :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다 (Accede to demands for change in policy)

0833 : 권리에 대한 요구에 응하다 (Accede to demands for rights)

0834 : 제도나 정권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다 (Accede to demands for change in institutions, regime)

084 : 반환과 석방 (Return, release, not specified below)

0841 : 인사 반환과 석방 (Return, release person(s))

0842 : 재산 반환과 압류 해제 (Return, release property)

085 : 경제적 제재, 보이콧, 금수 조치를 완화하다 (Ease economic sanctions, boycott, embargo)

086 : 국제적 개입을 허용하다 (Allow international involvement, not specified below)

0861 : 평화유지군의 배치를 받아들이다 (Receive deployment of peacekeepers)

0862 : 감독관을 받아들이다 (Receive inspectors)

0863 :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다 (Allow humanitarian access)

087 : 군사적 개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다 (De-escalate military engagement)

0871 : 휴전을 공언하다 (Declare truce, ceasefire)

0872 : 군사적 봉쇄를 완화하다 (Ease military blockade)

0873 : 군대를 해산하다 (Demobilize armed forces)

0874 : 군사적으로 후퇴하거나 항복하다 (Retreat or surrender militarily)

090 : 조사하다 (Investigate, not specified below)

091 : 범죄나 부패를 조사하다 (Investigate crime, corruption)

092 : 인권 침해를 조사하다 (Investigate human rights abuses)

093 : 군사 행동을 조사하다 (Investigate military action)

094 : 전쟁 범죄를 조사하다 (Investigate war crimes)

10 : 요구하다 (DEMAND)

100 : 요구하다 (Demand, not specified below)

101 : 물리적 협력을 요구하다 (Demand material cooperation, not specified below)

1011 : 경제적 협력을 요구하다 (Demand economic cooperation)

1012 :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다 (Demand military cooperation)

1013 : 사법 공조를 요구하다 (Demand judicial cooperation)

1014 : 정보 협력을 요구하다 (Demand intelligence cooperation)

102 : (정책 지지와 같은) 외교적 협력을 요구하다 (Demand diplomatic cooperation (such as policy support))

103 : 물질적 원조를 요구하다 (Demand material aid, not specified below)

1031 : 경제적 원조를 요구하다 (Demand economic aid)

1032 : 군사적 원조를 요구하다 (Demand military aid)

1033 : 인도주의적 원조를 요구하다 (Demand humanitarian aid)

1034 : 군사적 보호나 평화유지를 요구하다 (Demand military protection or peacekeeping)

104 :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다 (Demand political reform, not specified below)

1041 : 리더십의 변화를 요구하다 (Demand change in leadership)

1042 :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다 (Demand policy change)

1043 : 권리를 요구하다 (Demand rights)

1044 : 제도나 정권의 변화를 요구하다 (Demand change in institutions, regime)

105 : 양보를 요구하다 (Demand that target yields, not specified below)

1051 : 행정적 제재 완화를 요구하다 (Demand easing of administrative sanctions)

1052 : 정치적 반대의 완화를 요구하다 (Demand easing of political dissent)

1053 : 인사나 재산 압류 해제를 요구하다 (Demand release of persons or property)

1054 : 경제적 제재, 보이콧, 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다 (Demand easing of economic sanctions, boycott, or embargo)

1055 : (중재가 아닌) 국제적 개입의 허용을 요구하다 (Demand that target allows international involvement (non-mediation))

1056 : 군사적 개입의 단계적 완화를 요구하다 (Demand de-escalation of military engagement)

106 : 만남과 협상을 요구하다 (Demand meeting, negotiation)

107 : 분쟁 조정을 요구하다 (Demand settling of dispute)

108 : 중재를 요구하다 (Demand mediation)

11: 불만을 갖다 (DISAPPROVE)

- 110: 불만을 갖다 (Disapprove, not specified below)
- 111: 비평하거나 비난하다 (Criticize or denounce)
- 112: 고발하다 (Accuse, not specified below)
 - 1121: 범죄나 부패를 고발하다 (Accuse of crime, corruption)
 - 1122: 인권 침해를 고발하다 (Accuse of human rights abuses)
 - 1123: 공격을 고발하다 (Accuse of aggression)
 - 1124: 전쟁 범죄를 고발하다 (Accuse of war crimes)
 - 1125: 간첩행위나 반역죄를 고발하다 (Accuse of espionage, treason)
- 113: 반대 의견을 모으다 (Rally opposition against)
- 114: 공식적으로 불평하다 (Complain officially)
- 115: 소송을 제기하다 (Bring lawsuit against)
- 116: 유죄나 법적인 책임을 묻다 (Find guilty or liable (legally))

12: 거절하다 (REJECT)

- 120: 거절하다 (Reject, not specified below)
- 121: 물리적 협력을 거절하다 (Reject material cooperation)
 - 1211: 경제적 협력을 거절하다 (Reject economic cooperation)
 - 1212: 군사적 협력을 거절하다 (Reject military cooperation)
- 122: 물리적 원조에 대한 요청이나 요구를 거절하다 (Reject request or demand for material aid, not specified below)
 - 1221: 경제적 원조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다 (Reject request for economic aid)
 - 1222: 군사적 원조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다 (Reject request for military aid)
 - 1223: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다 (Reject request for humanitarian aid)
 - 1224: 군사적 보호나 평화유지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다 (Reject request for military protection or peacekeeping)
- 123: 정치적 개혁에 대한 요청이나 요구를 거절하다 (Reject request or demand for political reform, not specified below)
 - 1231: 리더십의 변화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다 (Reject request for change in

leadership)

- 1232: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다 (Reject request for policy change)
- 1233: 권리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다 (Reject request for rights)
- 1234: 제도나 정권의 변화에 대한 요청을 거절하다 (Reject request for change in institutions, regime)
- 124: 양보를 거부하다 (Refuse to yield, not specified below)
 - 1241: 행정적 제재 완화를 거부하다 (Refuse to ease administrative sanctions)
 - 1242: 대중의 반대 완화를 거부하다 (Refuse to ease popular dissent)
 - 1243: 인사나 재산 압류 해제를 거부하다 (Refuse to release persons or property)
 - 1244: 경제적 제재, 보이콧, 금수조치 완화를 거부하다 (Refuse to ease economic sanctions, boycott, or embargo)
 - 1245: (중재가 아닌) 국제적 개입의 허용을 거부하다 (Refuse to allow international involvement (non mediation))
 - 1246: 군사적 개입의 단계적 완화를 거부하다 (Refuse to de-escalate military engagement)
- 125: 만나고, 의논하고, 협상하는 제안을 거절하다 (Reject proposal to meet, discuss, or negotiate)
- 126: 중재를 거절하다 (Reject mediation)
- 127: 분쟁 해결을 위한 계획이나 합의를 거절하다 (Reject plan, agreement to settle dispute)
- 128: 관습이나 법에 저항하다 (Defy norms, law)
- 129: 거부권 (Veto)

13: 위협하다 (THREATEN)

- 130: 위협하다 (Threaten, not specified below)
- 131: 비군사적인 위협을 하다 (Threaten non-force, not specified below)
 - 1311: 원조를 감축하거나 중단하는 위협을 하다 (Threaten to reduce or stop aid)
 - 1312: 제재, 보이콧, 금수조치로 위협하다 (Threaten with sanctions, boycott, embargo)
 - 1313: 관계를 줄이거나 깰다는 위협을 하다 (Threaten to reduce or break

relations)

- 132 : 행정적 제재로 위협하다 (Threaten with administrative sanctions, not specified below)
- 1321 : 정치적 자유의 제한으로 위협하다 (Threaten with restrictions on political freedoms)
- 1322 : 정당이나 정치인 금지로 위협하다 (Threaten to ban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 1323 : 통행금지를 부과함으로써 위협하다 (Threaten to impose curfew)
- 1324 : 긴급사태나 계엄령을 내리며 위협하다 (Threaten to impose state of emergency or martial law)
- 133 : 정치적 반대나 항의로 위협하다 (Threaten with political dissent, protest)
- 134 : 협상을 중단함으로써 위협하다 (Threaten to halt negotiations)
- 135 : 중재를 중단함으로써 위협하다 (Threaten to halt mediation)
- 136 : (중재가 아닌) 국제적 개입을 중단함으로써 위협하다 (Threaten to halt international involvement (non-mediation))
- 137 : 진압으로 위협하다 (Threaten with repression)
- 138 : 군사적으로 위협하다 (Threaten with military force, not specified below)
 - 1381 : 봉쇄함으로써 위협하다 (Threaten blockade)
 - 1382 : 점령으로 위협하다 (Threaten occupation)
 - 1383 : 비전통적 방식의 폭력으로 위협하다 (Threaten unconventional violence)
 - 1384 : 비전통적인 방식의 공격으로 위협하다 (Threaten conventional attack)
 - 1385 : 대량살상무기로 위협하다 (Threaten attack with WMD)
- 139 : 최후통첩을 하다 (Give ultimatum)

14 : 항의하다 (PROTEST)

- 140 : 정치적 반대를 하다 (Engage in political dissent, not specified below)
- 141 : 시위하거나 결집하다 (Demonstrate or rally, not specified below)
 - 1411 : 리더십의 변화를 위해 시위하다 (Demonstrate for leadership change)
 - 1412 : 정책의 변화를 위해 시위하다 (Demonstrate for policy change)
 - 1413 : 권리를 위해 시위하다 (Demonstrate for rights)
 - 1414 : 제도나 정권의 변화를 위해 시위하다 (Demonstrate for change in

institutions, regime)

- 142 : 탄식 투쟁하다 (Conduct hunger strike, not specified below)
 - 1421 : 리더십의 변화를 위해 탄식 투쟁하다 (Conduct hunger strike for leadership change)
 - 1422 : 정책의 변화를 위해 탄식 투쟁하다 (Conduct hunger strike for policy change)
 - 1423 : 권리를 위해 탄식 투쟁하다 (Conduct hunger strike for rights)
 - 1424 : 제도나 정권의 변화를 위해 탄식 투쟁하다 (Conduct hunger strike for change in institutions, regime)
- 143 : 파업하거나 보이콧하다 (Conduct strike or boycott, not specified below)
 - 1431 : 리더십의 변화를 위해 파업하거나 보이콧 하다 (Conduct strike or boycott for leadership change)
 - 1432 : 정책의 변화를 위해 파업하거나 보이콧하다 (Conduct strike or boycott for policy change)
 - 1433 : 권리를 위해 파업하거나 보이콧하다 (Conduct strike or boycott for rights)
 - 1434 : 제도나 정권 변화를 위해 파업하거나 보이콧하다 (Conduct strike or boycott for change in institutions, regime)
- 144 : 통과를 방해하거나 막다 (Obstruct passage, block, not specified below)
 - 1441 : 리더십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막다 (Obstruct passage to demand leadership change)
 - 1442 :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막다 (Obstruct passage to demand policy change)
 - 1443 : 권리에 대해 요구를 막다 (Obstruct passage to demand rights)
 - 1444 :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막다 (Obstruct passage to demand change in institutions, regime)
- 145 : 폭력적인 시위를 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다 (Protest violently, riot, not specified below)
 - 1451 : 리더십의 변화를 위해 폭력적인 시위에 참여하다 (Engage in violent protest for leadership change)
 - 1452 : 정책의 변화를 위해 폭력적인 시위에 참여하다 (Engage in violent protest for policy change)
 - 1453 : 권리를 위해 폭력적인 시위에 참여하다 (Engage in violent protest for

rights)

1454 : 제도나 정권의 변화를 위해 폭력적인 시위에 참여하다 (Engage in violent protest for change in institutions, regime)

15 : 물리력을 과시하다 (EXHIBIT FORCE POSTURE)

- 150 : 군사력 경찰권을 보여주다 (Demonstrate military or police power, not specified below)
- 151 : 경찰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다 (Increase police alert status)
- 152 : 군대의 경계 태세를 강화하다 (Increase military alert status)
- 153 : 경찰권을 가용하거나 강화하다 (Mobilize or increase police power)
- 154 : 군대를 가용하거나 강화하다 (Mobilize or increase armed forces)
- 155 : 사이버 힘을 가용하거나 강화하다 (Mobilize or increase cyber-forces)

16 : 관계를 줄이다 (REDUCE RELATIONS)

- 160 : 관계를 줄이다 (Reduce relations, not specified below)
- 161 : 외교적 관계를 줄이거나 깨다 (Reduce or break diplomatic relations)
- 162 : 물질적 원조를 줄이거나 중지하다 (Reduce or stop material aid, not specified below)
 - 1621 : 경제적 도움을 줄이거나 중지하다 (Reduce or stop economic assistance)
 - 1622 : 군사적 도움을 줄이거나 중지하다 (Reduce or stop military assistance)
 - 1623 : 인도주의적 도움을 줄이거나 중지하다 (Reduce or stop humanitarian assistance)
- 163 : 금수조치, 보이콧, 제재를 부과하다 (Impose embargo, boycott, or sanctions)
- 164 : 협상을 중지하다 (Halt negotiations)
- 165 : 중재를 중지하다 (Halt mediation)
- 166 : 추방하거나 철수시키다 (Expel or withdraw, not specified below)
 - 1661 : 평화유지군을 추방하거나 철수시키다 (Expel or withdraw peacekeepers)
 - 1662 : 감독관이나 관찰자를 추방하거나 철수시키다 (Expel or withdraw inspectors, observers)
 - 1663 : 원조 단체들을 추방하거나 철수시키다 (Expel or withdraw aid agencies)

17 : 강요하다 (COERCE)

- 170 : 강요하다 (Coerce, not specified below)
- 171 : 재산을 압류하거나 피해를 입히다 (Seize or damage property, not specified below)
 - 1711 : 재산을 몰수하다 (Confiscate property)
 - 1712 : 재산을 파괴하다 (Destroy property)
- 172 :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다 (Impose administrative sanctions, not specified below)
 - 1721 :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다 (Impose restrictions on political freedoms)
 - 1722 : 정당이나 정치인을 금지하다 (Ban political parties or politicians)
 - 1723 : 통행금지를 부과하다 (Impose curfew)
 - 1724 : 긴급사태나 계엄령을 내리다 (Impose state of emergency or martial law)
- 173 : 체포, 구금, 법적 조치를 취하다 (Arrest, detain, or charge with legal action)
- 174 : 강제 추방하다 (Expel or deport individuals)
- 175 : 폭력적인 억압술을 사용하다 (Use tactics of violent repression)
- 176 : 사이버 상의 공격을 하다 (Attack cybernetically)

18 : 공격하다 (ASSAULT)

- 180 : 비전통적 방식의 폭력을 사용하다 (Use unconventional violence, not specified below)
- 181 : 납치하거나 인질로 잡다 (Abduct, hijack, or take hostage)
- 182 : 물리적 공격을 가하다 (Physically assault, not specified below)
 - 1821 : 성폭행하다 (Sexually assault)
 - 1822 : 고문하다 (Torture)
 - 1823 : 물리적 공격으로 살해하다 (Kill by physical assault)
- 183 : 자살 폭탄, 자동차 폭파, 다른 비군사적 폭파를 행하다 (Conduct suicide, car, or other non-military bombing, not specified below)
 - 1831 : 자살 폭탄을 실행하다 (Carry out suicide bombing)
 - 1832 : 운송수단 폭격을 실행하다 (Carry out vehicular bombing)
 - 1833 : 도로변 폭격을 실행하다 (Carry out roadside bombing)

■ 참고문헌 ■

- 1834 : 위치 폭격을 실행하다 (Carry out location bombing)
- 184 : 인간 방패를 이용하다 (Use as human shield)
- 185 : 암살을 시도하다 (Attempt to assassinate)
- 186 : 암살하다 (Assassinate)

19 : 싸우다 (FIGHT)

- 190 : 전통적인 방식의 군사력을 사용하다 (Use conventional military force, not specified below)
- 191 : 봉쇄나 이동 제한을 부과하다 (Impose blockade, restrict movement)
- 192 : 영토를 점령하다 (Occupy territory)
- 193 : 소규모 군대나 무기로 싸우다 (Fight with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 194 : 대포나 탱크로 싸우다 (Fight with artillery and tanks)
- 195 : 비행체를 이용하다 (Employ aerial weapons, not specified below)
 - 1951 : 정밀 타격이 가능한 비행체를 이용하다 (Employ precision-guided aerial munitions)
 - 1952 : 원격 조종 비행체를 이용하다 (Employ remotely piloted aerial munitions)
- 196 : 정전협정을 위반하다 (Violate ceasefire)

20 : 비전통적 방식의 대규모 폭력을 자행하다 (USE UNCONVENTIONAL MASS VIOLENCE)

- 200 : 비전통적 방식의 대규모 폭력을 자행하다 (Use unconventional mass violence, not specified below)
- 201 : 대규모 추방을 자행하다 (Engage in mass expulsion)
- 202 :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다 (Engage in mass killings)
- 203 : 인종 청소를 자행하다 (Engage in ethnic cleansing)
- 204 :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다 (U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ot specified below)
 - 2041 : 화학적, 생물학적, 방사성 무기를 사용하다 (Use chemical, biological, or radiological weapons)
 - 2042 : 핵무기를 사용하다 (Detonate nuclear weapons)

- 박종희. 2014. “베이지안 사회과학 방법론이란 무엇인가.” 『평화연구』 제22집 1호.
- 박철희. 2014. “일본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일본비평』 제6집 1호.
- 손 열. 2018. “위안부 합의의 국제정치: 정체성-안보-경제 넥서스와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 『국제정치논총』 제58집 2호.
- 조세영. 2014.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서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Azar, Edward E. 1980. “The conflict and peace data bank (COPDAB) proje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
- Boulding, Kenneth E. 1964. “Toward a Theory of Peace.” In Roger Fisher (eds.), *International Conflict and Behavioural Science: The Craigville Paper*. New York: Basic Books.
- Bull, Hedley. 1966. “International Theory: The Case for a Classical Approach.” *World Politics* 18-3.
- Diehl, Paul F., Gary Goertz, and Yahve Gallegos. 2020. “Peace data: Concepts, measurement, patterns, and research agenda.”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 Gerner, Deborah J., Philip A. Schrodt, and Ömür Yilmaz. 2009. *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s (CAMEO) Codebook*. <http://eventdata.psu.edu/data.dir/cameo.html>(검색일: 2019.11.10).
- Goldstein, Joshua S. 1992.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
- Höglund, Kristine, and Mimmi Söderberg Kovacs. 2010. “Beyond the absence of war: the diversity of peace in post-settlement societ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6.
- Kaplan, Morton. 1966. “The New Great Debate: Traditionalism vs. Sci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orld Politics* 19-1.
- King, Gary, and Will Lowe. 2004. “An automated information extraction tool for international conflict data with performance as good as human coders: A rare events evaluation desig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3.
- Leetaru, Kalev, and Philip A. Schrodt. 2013. *GDELT: 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s, and Tone, 1979-2012*. <http://data.gdeltproject.org/documentation/ISA.2013.GDELT.pdf>(검색일: 2019.11.10).
- Li, Quan. 2019. “The Second Great Debate Revisited: Explaining the Impact of the Qualitative-Quantitative Divid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1-3.
- McClelland, Charles A. 1976. *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WEIS) Codebook* (ICPSR 5211).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Ann Arbor.
- Pierson, Paul. 2003. “Big, Slow-Moving, and ... Invisible — Macrosocial Processes in the Study of Comparative Politics.” In James Mahoney and Dietrich Rueschemeyer (eds.),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rkees, Meredith Reid, and Frank Wayman. 2010. *Resort to War: 1816-2007*. Washington D.C.: CQ Press.
- Schrodt, Philip A. 2012. *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 (CAMEO) Event and Actor Codebook*. <http://data.gdeltproject.org/documentation/CAMEO.Manual.1.1b3.pdf>(검색일: 2019.11.10).
- Singer, J. David. 1969. “The Incomplete Theorist: Insight without Evidence.” In K. Knorr and J. N. Rosenau (eds.), *Contending Approaches to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mall, Melvin, and David Singer. 1982. *Resort to Arms: International and Civil War, 1816-1980*. New York: Sage.
- Tomlinson, Rodney G. 1993. “World Event Interaction Survey (WEIS) Coding Manual.” Manuscript, United State Naval Academy.
- Tønnesson, Stein. 2017. *Explaining the East Asian Peace: A Research Story*. Copenhagen: NIAS Press.
- 日本経済新聞. 2012. “自民総裁に安倍氏 決選で石破氏を逆転(永田町ライブ).”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K2601D_W2A920C1000000/(검색일: 2019.11.30).

• 국문

본 연구는 최근 구글이 공개한 빅 데이터(GDELT: 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를 활용해 한일 간 평화관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평화연구에 GDELT 자료를 활용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해당 자료가 국가 간 평화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둘째, 한일 양국 간 평화관계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국면이 언제였는지를 전환점 분석(change point analysis)을 통해 밝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한일 국가 간 주요 사건이 발생했던 국면마다 GDELT 사건 자료들은 그에 적합한 변화 양상을 적절하게 감지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환점 분석에 따르면 한일관계는 두 번의 변곡점을 통과하며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첫 번째 전환점은 2012년 10월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2기 아베 내각 출범이 맞물렸던 시기였고, 두 번째 전환점은 위안부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격렬한 외교전을 펼치던 2015년 1월이었다. 즉, 한일관계를 다루는 세계 언론의 어조가 이 두 시기를 겪으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던 것이다.

[주제어] 평화관계지수, 빅 데이터, GDELT, 평화연구, 한일관계

• 영문

This study traces the changes in peaceful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using GDELT(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 released by Google recently. The aim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this study is introductory research applying the GDELT event data to peace research and evaluates how accurately the data can capture the changes of peaceful relations between countries. Seco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peacefu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ave been deteriorated and when it was a critical phase that affected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rough the change point analysis (CPA).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GDELT event data properly detected the appropriate pattern of change in each phase of major events that occurred between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a change point analysis, in particular,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d deteriorated significantly, passing two critical phases. The first change point was in October 2012, when President Lee Myung-bak visited Dokdo (August), and the second Abe Cabinet was launched (November). The second change point was in January 2015, when South Korea and Japan fought diplomatic wa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comfort women issue. In other words, the average tone of the all over the news dealing with South Korea-Japan relations had moved significantly toward the negative direction, going through these two critical periods.

[Key words] peaceful relationship index, big data, GDELT, peace study, ROK-Japan relationship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 동아시아 주요국 간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한동균 |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1. 서론

최근 한반도 외교 및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크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 및 미국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아시아 정세가 매우 경색된 양상을 보였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 발표¹⁾를 기점으로 대화와 협력으로의 국면 전

1)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평양시 기준 오전 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핵무

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비핵화 가능성까지 언급한 북한의 태도 변화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조성되던 신(新)냉전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비록 남북정상회담 및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그동안 북한이 각국 정상들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한 수뇌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등 현재 담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가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북한과 미국임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북한의 변화에 따른 동아시아 주요국 및 관련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중국소외론(China Passing)’에서부터 ‘중국배후설’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할을 둘러싸고 양 극단의 논란이 제기되었다.²⁾ 중국은 종전선언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휴전협정 체결국으로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성

력 완성’을 명분 삼아 이례적으로 남북관계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며,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통한 국면 전환과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 있는 핵강국’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함. 특히, 한국의 평창올림픽과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을 ‘민족적 대사’로 연계하며 이를 남북관계를 개선할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고,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실현,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 등을 주장하며 매우 파격적이고 과감한 제안을 제시함.

2) 이동률,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2019), pp.157-158.

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를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미 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과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지정학(geo-economics)적 또는 지정학(geo-political)적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닌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편, ‘중국몽(中國夢)’으로 대변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군사대국화,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행하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점하고 있고, 향후 남북관계와 통일, 그 이후의 동아시아 평화 문제에 반드시 결부될 중국의 인식과 접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국의 대(對)동아시아 주요국의 정책들을 고찰함과 동시에 주요 당사국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대(對)동아시아 정책 고찰

21세기 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아마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시 주석은 ‘중국의 평화로운 발전과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이 오히려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가속화시키면서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³⁾ 미중 간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심화⁴⁾됨과 동시에 한국은 미중 간의 경쟁과 대립구조 인한 안보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는 여전히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나 중국과는 최대 경제교역관계, 북한과는 적대적 관계, 북한과 중국은 ‘당대당(黨對黨)’의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긴장국면을 조성한 북한에 대해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부터 2017년까지 총 10차례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우리 또한 ‘5.24조치’ 및 개성공단 폐쇄 등 강도 높게 북한을 압박하게 된다. 하지만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⁵⁾ 선언 이후 2018년에 ‘핵·경제 병진노선’ 완료 선언 및 ‘사회주의 강성국가 원년’으로 규정하는 등 ‘사회주의 경제전설’이라는 경제 중심의 실용

3) 정재홍,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한반도 다자안보체제 구축 가능성 고찰,” 『중국 지식네트워크』 제5권 1호(2015), pp.26-27.
 4) Jack S. Levy,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Rise of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p.11-33.
 5) 아직까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은 아니지만 핵무장 능력을 가진 핵능력 국가(nuclear capable country)인 것은 사실이며,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를 비롯해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핵무기가 실전 배치된 상황임.

적 노선으로 선회⁶⁾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북한경제 90% 이상이 중국으로 집중⁷⁾되어 있는 만큼 북한과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향후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중국의 대(對)동아시아 주요국 정책 고찰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중 간 ‘세력전이’ 구조 속에서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이 최근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1. 중국의 대(對)북 정책

1) 중국의 대(對)북 정책 기초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순망치한(唇亡齒寒)’으로 비유해왔다. 과거 중국의 ‘국공내전(國共內戰)’에 조선의용군이 중국공산당을 도와주었고, ‘6.25전쟁’에서는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돈독한 혈맹관계를 유지했

6) 그동안 북한이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고조시킨 목적이 궁극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북미수교 정상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북한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7) 이상만·한동균, “남·북·중 지정학적 협력의 정치경제,” 『한중사회과학학회』 제17권 3호(2019), pp.21-22.
 8) 북한은 COVID를 앞세운 미국의 핵폐기 압박에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밀리지 않고, 중국은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소외론’을 막고 향후 한반도 영향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다. 이처럼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한은 해양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해왔으나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에게 새로운 논쟁을 제공하게 된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는 한편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을 감싸고 지원해야 하는지, 과연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등의 현실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략적 자산을 강조하는 중국은 미중 간의 대치 구도가 엄연한 국제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충분한 카드이자 지정학적으로도 완충지대로서 훌륭한 자산이라고 평가한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다.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갈등을 피하는 것과 동아시아지역 주요국 간 긍정적 관계 및 대화 유지 등 이러한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호 보완적이기도 함과 동시에 모순적인 측면도 있다.¹⁰⁾ 또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대외 전략, 한반도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그 연장선상에서 대북 정책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¹¹⁾

첫째, 북한체제의 안정과 유지로 북한체제의 불안정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불안정에서 야기되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방지하는 것이 중국의 대북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의 상실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보다는 존속을 위한 중국의 지지로 나타난다.

둘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비핵화로 중국은 북핵 문제를 언급할 때 한반도 비핵화를 연계시켜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통일 한국 이후 한반도 상황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에서 나온 발상으로 북핵 문제로 야기되는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과 이에 따른 군비증강 추세는 중국으로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은 북한체제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한 후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가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도일 것이다. 가능한 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 유지하기 위한 대북 영향력 확대는 북중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 또는 제재를 통해 압박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대북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탁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도 북핵 문제와 체제 위기의 문제는 폐쇄적인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현실적으로 향후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며, 북한의 경제난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는 회복을 기대하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국에게 보다 유리한

9) 나영주,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민족연구』 제65호(2016), pp.69-70.

10) Gill, Bates, “China’s North Korea Policy,” Special Report 283,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July 2011), pp.2-3.

11) 문대근, 『중국의 대북정책: 정책 결정 요인 연구』(서울: 늘봄플러스, 2013), p.60.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경제발전과 지역 안정,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 실현, 영향력 확대를 통한 입지 강화 등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를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중국의 이익을 저해하고, 중국의 국익인 안보와 경제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최근 중국의 대(對)북 정책 변화 요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이 최근 대북 정책의 전반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정책 지속과 변화는 중국이 전반적인 국가전략 속에서 북한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므로 동아시아 주요국 간 상호관계와 모순적 목표들로 인해 지극히 복잡한 요인들이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대북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미중관계의 변화로 시진핑 체제 들어서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¹²⁾를 제안한 이후 국제적 제반 현안에서 미중 경쟁과 갈등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관세로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은 아직도 타협점을 찾지 못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거나 중국의 핵심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은 힘의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고, 이에 종래의 특수 관계

12) 시진핑 주석이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중국의 외교전략으로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공존을 추구하지는 의미가 담겨 있음.

인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즉, 동아시아 역내에서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힘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동기가 부여될 때 중국의 대북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¹³⁾

둘째, 중국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 변화로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stake holder)'로서 역할을 해왔고, 최근에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역량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¹⁴⁾ 동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역내 및 관련국들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지지와 동조는 역내 불안을 조성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정책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의한 영향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매우 경사되는 동맹 정치의 형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카드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긴장시켜 왔다.¹⁵⁾ 정치적 관계 및 군사적 측면에서 한중 간 신뢰수준이 확보된다면 대북 정책 변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까지도 가정해볼 수 있지만 북중관계가 우호적이고 전략적 소통이 강화될 때 역사적인 혈맹관계 및 '순망치한'의 지정학적 인식의 사고는 팽배해질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말미암아 북한에 대

13) 김강녕, "중국의 대북정책·북중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글로벌정치연구』 제 11권 1호(2019), pp.54-57.

14) 하만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유연한 접근 필요," 『아시아투데이』 2019년 6월 20일.

15) 한광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EAI-CISS NASD 2010 Security Briefings Series』 제3호(2010), pp.5-10.

한 감정이 좋지 못했지만 북한의 국가전략 수정으로 인해 대(對)북 정책의 또 다른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시진핑 체제 이후에도 중국의 대(對)북 정책은 ‘변화’보다 ‘지속’의 측면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의 대(對)북 정책 핵심이 ‘한반도 현상유지’임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정책기조를 급격히 전환하기보다는 동아시아 안정이 국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균형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

1)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 기조

한중교류는 1992년 한중수교 전까지 냉전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양국 간 국가적 차원의 접촉이나 교류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았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북한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없었으며, 특히, 1970년대 들어서 중국은 적대세력으로 간주해 온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진행되었지만 한국과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남북한 간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 조성이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함과 동시에 한국이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으로 경제개혁을 막 시작한 중국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1978년 덩소평의 개혁개방을 계기로 외교 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평화와 안정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은 중국지도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있다.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 새로운 안보관 수

립, 국가의 대소강약, 이념 및 체제의 상이를 뛰어 넘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동존이(求同存異)¹⁶⁾를 강조하는 중국은 현재에도 한반도의 평화적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추구하려는 게 일관된 입장이자 원칙이다.¹⁷⁾ 한중수교 27년이 넘은 현재 한중관계는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는 ‘정온경열(政溫經熱)’ 시대로 진입하였고, 양국 간 전(全)방위적인 경제통합의 기반을 모색하는 등 한층 더 높은 질적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¹⁸⁾ 이처럼 전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관계 변화 속에 중국이 대(對)한국 전략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및 정책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호혜로 한중경제는 지리적 접근성, 문화의 유사성, 양국경제의 상호보완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최근까지도 상호 경제적 실익을 향유하는 등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雙贏)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중 교역액은 1992년 62억 달러에서 2018년 2,680억 달러¹⁹⁾로 26년간 약 43배 이상 증가하면서 중국은 2003년부터

16)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임. 2016년 9월 중국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를 언급하였고, 이에 박 대통령은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化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되 이견이 있는 부분까지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지향해야 한다고 화답한 바 있음.

17) 서상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전략연구』 제63권(2014), pp. 83-86.

18) 한동균,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중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분석,” 『무역연구』 제15권 2호(2019), pp.264-265.

19)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검색일: 2019.11.12).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한국은 2013년부터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²⁰⁾ 이처럼 경제 외적인 문제로 한중관계가 경색 또는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항상 상존해 있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한중관계를 볼 때 양국관계는 향후에도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정치적 선린으로 현재 한중관계는 경제적 호혜 협력 수준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적 협력을 지향하며,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위상은 '선린우호관계'로 김대중 정부 시기인 1998년에 이르러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선린우호관계'는 협력의 기초를 확립했다는 제한적 의미로 과거 중국은 경제교류 영역에서만 우리와의 관계를 우선 시하고, 정치외교 협력은 북한에 집중하는 정책을 취했다.²¹⁾ 하지만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2003년에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하여 본격적으로 한중 간 전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양국관계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 및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 등 역내 안보와 글로벌 이슈에 관한 정치적 협력 또한 심화되었다.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까지 격상된 한중관계는 최근 내실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치외교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 강화 및 지역정세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통상 분야에서 양적 발전과 더불어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안보적 협력으로 한중 간 협력관계의 단계를 높여온 배경에는

20) 韩东均, 『韩国对华直接投资对中国经济增长影响的实证分析研究』, 中国人民大学博士学位论文(北京: 中国人民大学, 2018), pp.115-116.

21) 왕윈,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와 한중관계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서울: 성균관대학교, 2018), pp.73-86.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도 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한반도에 관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주요 당사자로 인식함과 동시에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²²⁾

2) 최근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 변화 요인

중국의 영향력이 국제정치와 경제 분야 등에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국제규범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려는 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지정학적으로 핵심 지역 중 하나인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은 중국 대외전략의 주요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의 방한(訪韓)은 한중외교사에 이정표를 남긴 외교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지도자가 취임 후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전통을 깬다는 데 적지 않은 의미도 있지만 중국이 한국을 중요시한다는 의미로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³⁾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면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 국내 정책 변화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최상위 국정 목표는 '중국몽'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²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신상태(新常态)²⁵⁾ 시

22) 서상문, "중국의 대한민국 정책의 지속과 변화," 『전략연구』 제63권(2014), pp. 83-86.

23) 김진호, "시진핑 방한으로 본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한중관계," 『중국과 중국학』 제23호(2014), pp.160-165.

대의 성공적인 안착과 중국경제의 체질개선을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성숙기²⁶⁾에 접어든 중국경제는 한중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한중 FTA 체결 및 통화스와프 연장 등 경제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2025)’²⁷⁾와 ‘인터넷플러스(互聯網+)’²⁸⁾ ‘일대일로(一帶一路)’²⁹⁾ 정책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함에 따라 중국의 대(對)한국

-
- 24)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강(小康: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19년까지 중국을 조화로운 현대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시진핑 체제의 미래비전임.
 - 25) 뉴노멀(New Normal)의 중국식 표현으로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 즉, 경제성장률은 한 단계 떨어지지만 성장률 수치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성장의 내용이 질적으로 개선된 상태를 가리킴.
 - 26) 과거 투자와 수출, 노동력을 앞세운 경제성장 전략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소비와 투자 간 불균형, 환경오염, 자원사용량 급증 등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평한 분배와 친환경 성장 등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혁신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27) ICT와 제조업을 융합한 스마트 제조업 환경 구축을 목표로 향후 30년간 10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산업고도화를 실현하고자 2015년 5월에 발표한 중국의 제조업 육성정책임.
 - 28) 모든 전자기기에 인터넷을 더한다는 뜻으로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축인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및 모바일 인터넷,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을 제조업과 융합시켜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금융 등의 발전을 이루고,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2015년 3월에 발표한 중국 정부의 액션플랜임.
 - 29)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2015년 3월 중국 정부가 공식 지정한 대외 정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는 대략 60여 개국, 세계인구의 63%에 이르는 44억 명, 세계 GDP의 30%에 달하는 24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임.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산업과의 경쟁을 심화시켜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둘째, 지역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의 필요성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이후 미중관계, 중일관계가 경직된 상태이고, 일본의 우경화로 한일관계, 중일관계도 대립의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G2로 성장한 중국의 성숙된 대외정치를 표출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13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 일본 과거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길 강력히 희망³⁰⁾하면서 동맹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 및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변국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견국인 한국과 패권경쟁을 지향하는 중국이 갖고 있는 비대칭적인 국력 차이 및 2017년 한미 군사동맹에 의한 사드(THAAD)배치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³¹⁾

셋째, 북한의 급격한 국가전략 수정으로 그동안 동아시아의 복합적 양자관계는 북한이 도발하면 한중 및 중미관계가 악화되고, 북중관계는 강화되는 구조를 형성해왔다.³²⁾ 중국의 지정학적 이해와 현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국 외교를 견인하려는 개연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중관계는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비록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중국이 북

30) 藍雅歌, “习近平即将访韩 日本焦虑韩媒兴奋,” 『人民网环球时报』 2014年 6月 20日.
 31) 백우열·함명식, “중국의 대한국 공공외교 성과와 한계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5호(2017), pp.136-137.
 32) 이희옥 외, 『1992-2012 한중관계 어디까지 왔나』(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2), p.41.

한에 대한 전략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과의 대립에서 북한이 중국에 불리하게 변화하는 상황 및 남북한 문제 해결이 결코 미국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하는 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한반도의 한국과 북한, 나아가 동아시아 정세가 중국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 변화를 통해 대외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³³⁾

3.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

1)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 기초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을 비롯한 기존 강대국들이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특히, 미중관계는 국제정치에서 그 어떤 양자관계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국과 미국 두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비극을 방지하고, 미중 양국이 국제체제에서의 안정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⁴⁾ 이에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 및 특징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 기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확대를 위한 실용주의 노선으로 그동안 중국은 국제상황

에 맞게 외교 정책을 변화하며 현실적으로 운용해왔다.³⁵⁾ 하지만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 기초는 과거 투쟁의 대상이었던 미국과의 정식 국교 수립을 통한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경제와 국력 수준을 맞추기 위한 추격 발전을 지향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중국의 기본 외교 정책인 ‘반제(反帝)노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현실에 부합하게 전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³⁶⁾

둘째, 이데올로기 극복에 따른 ‘온구중진(穩求中進)’ 전략으로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은 안정 속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미국과의 국교 수립 및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친(親)서방적 모습으로 전환한 중국은 결과적으로 국력배양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³⁷⁾ 또한, 중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인한 국력 상승이 구소련 해체 이후 지속되어왔던 미국의 초강대국적 지위가 변화하였으며, 21세기 국제질서 체제가 이미 다극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 및 미중관계 변화도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구소련과 대적하기 위해 중국과 수교를 했던 국제정치적 환경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고, 중국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적 자세를 취하면서 대(對)미국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5) 과거 중국의 외교노선이 1950년대 ‘일변도(一邊倒),’ 1960년대 ‘중간지대(中間地帶),’ 1970년대 ‘제3세계론(第3世界論),’ 1980년대 ‘독립자주(獨立自主),’ 1990년대 ‘대국외교(大國外交),’ 2000년대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외교행태를 보이며, 표면적으로 현란해 보이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외교 정책의 기초를 변화해옴.

36) 박덕환, “중국의 부상과 중미관계 변화,” 『동아인문학』 제31집(2015), pp.542-547.

37) 김홍규 엮음,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안보』(서울: 동아시아재단, 2015), p.70.

33) 成淑君, “甲午风云中朝关系,” 『凤凰网』 2017年 7月 11日.

34) 孙哲, 『新型大国关系: 中美协作新方案』(北京: 时事出版社, 2013), p.5.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 목표는 국력배양으로 국력배양 후 중국은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 즉,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³⁸⁾

2)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 변화 요인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가와 더불어 미중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미중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³⁹⁾ 현재 미중관계는 현재 군사, 안보, 경제, 무역, 환율, 에너지, 기후 변화, 환경보호, 인문사회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까지 대만 문제와 안보가 미중 간 주요 이슈였다면 현재는 무역과 투자, 지적재산권, 한반도 문제 등이 모두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최근 중국의 대(對)미국 전략 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지위 변화로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를 제의하는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對)미국 전략에 대한 변화는 과거 미국의 제의를 받기만 한 중국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미중관계를 정의하고, 미중관계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다.⁴⁰⁾ 또한, 이는 중국 대외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미국이 이를 받아

38) 마틴자크, 안새민 엮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울: 부키, 2010), p.514.
39) 이기우, 『중국의 대미국 전략 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서울: 연세대학교, 2014), pp.87-95.
40) 邹志强·丽江, “崛起语境下的中美新型大国关系,” 『政治理论』 第138期(2013), p.54.

들인 것도 중국의 대(對)미국 외교 전략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국내정치 환경 및 경제 상황에 따른 변화로 2013년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중국은 국내 발전을 중심으로 안정적 정치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⁴¹⁾ 전쟁이나 냉전의 촉발을 피하면서도 국익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발발한 미중 무역분쟁을 보더라도 경제적 측면에서 중미 간 밀접한 관계⁴²⁾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 함께 손해보고, 협력하면 함께 번영하는 관계’임을 강조한 바 있다.⁴³⁾ 이는 국내 경제발전과 안정된 정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인 한편, 홍콩과 남중국해 문제 등 역사와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핵심 이익으로 규정하여 타협하지 않고 있다.

셋째, 미국의 국내 환경 및 정치 기조 변화로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위해 국내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⁴⁾ 뿐만 아니라 TPP 탈퇴,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등 보

41)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124.
42) 미중무역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2018년 3월 관세로부터 촉발된 미중 무역분쟁은 현재까지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음.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2018년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4,192억 달러로 미국 무역적자 총액의 6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43) 尹航·张旗, “出席十二届全国人大二次会议解放军代表团成立,” 『解放军报』 2014年 3月 4日.
44) 이철용 외,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서울: LG경제연구원, 2017), pp. 19-20.

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회귀함에 따라 미국 국내 환경 및 정치 기조 변화가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자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으나 방법과 수순이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이슈에 비해 대내 이슈를 우선시하고 대내 정책에서는 성장률 수치를 중시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비협조적이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대외 이슈를 대내 이슈만큼 중시하고 대내 정책에서는 성장률 수치보다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며, 일련의 국제이슈들을 리드해나갈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뚜렷이 다른 만큼 중국의 대(對)미국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미중관계는 여러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된 민감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가장 강력한 자본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종합적 국력이 급격히 상승한 사회주의 국가로 상반된 정치체제를 갖고 있지만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비록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및 양국 간 지역외교 기조 등 갈등이 심화되어 협상에 많은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모두 현재의 양국관계나 현존의 국제질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장기간에 걸쳐 절충과 재절충이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양국 사이의 모순을 타협해가며 정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⁴⁵⁾

45) 이철용 외, 『향후 5년 미중관계 변화와 영향』(서울: LG경제연구원, 2017), pp. 19-23.

III.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최근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과 미국으로 세계적으로 ‘강대국화’되어 가면서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강대국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만이 아닌 동아시아지역 정체성과 비전에 있어서도 더욱 많은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중국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완화됨과 동시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미국과 경쟁하며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관련하여 최근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對)동아시아 정책 수립 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동아시아 주요국 간 정상회담⁴⁶⁾을 바탕으로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과

46) 정상회담의 경우 ‘차수(次數)’를 붙이지 않는 게 관례이나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주요국 간 정상회담을 다루기 때문에 편의상 2018년을 기준으로 시간순에

접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남북정상회담

1)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8년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로 분단 이후 70년 만에 북측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에 과거 남북관계는 11년 만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으며,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⁴⁷⁾을 발표하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은 4월 2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데 대해 박수를 보내고 두 정상의 정치적 결단과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직후 공식적으로 환영 입장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의 문호 루신(鲁迅)의 시구를 인용해 “온갖 어려움을 겪고도 형제 간의 정이 있어

서로 만나 한번 웃으니 원한을 다 씻어버릴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향후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의 새로운 여정을 개척하기를 희망하다.”⁴⁸⁾고 말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5월 2일 평양을 방문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국정에 부합하는 발전 방안과 경제건설을 지지하며, 최근 한반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세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북미 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바라며, 중국은 북한과의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으로 상응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⁴⁹⁾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부터 남북대화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명하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특히, 중국 외교부 경창(耿爽) 대변인은 3월 7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남북 양측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한반도 전체 국민과 관련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고, 동아시아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⁵⁰⁾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은 대(對)북 정책에 기반한 전쟁 상태의 종결과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경제건설을 향한 전략 및 무게중심 전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북한체제 안정을 지지하는 등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당사자이자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면서 동아

따라 각국 간 정상회담 앞에 차수를 붙임.

47)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판문점선언』은 연내 종전선언과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회담을 추진하여 65년간 이어져왔던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는 등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이 합의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짐.

48) 杨婷, “2018年4月27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新华网』 2018年 4月 27日.

49) 李佩, “专家折王毅访潮: 中朝关系更进一步, “中国被边缘化”无依据,” 『澎湃新闻』 2018年 5月 7日.

50) 吴婷婷, “2018年3月7日时事新闻(国内+国际),” 『联创世华』 2018年 3月 7日.

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2)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 5월 26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회담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 김정은 위원장이 일체의 형식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오면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는 다르게 사전 예고 없이 비밀리에 열린 깜짝 회담⁵¹⁾이다.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국 정상 간의 정례적인 만남과 직접 소통이 중요한 만큼 빠르게 전격적으로 열린 이번 회담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못지않게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측 의지와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정례기자회견 및 『외교부성명』, 공식 언론보도는 없었으나 ‘연합뉴스’ 질의에 서면 답변⁵²⁾⁵³⁾을 통해 중국의 공식입장을 엿볼 수 있다. 루캉(陆慷) 대변인은 서면 답변을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51)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를 자임하며 직접 중재에 나서 성사시키다 시피 한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서한에 의해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다급했던 북한과 한반도 운전대를 놓치고 미중 대결구도로 갈 수 있는 위기임을 알아챈 남북한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으로 남북한 양측 중 누가 먼저 회담을 제의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가 먼저 제의했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52) 심재훈, “중외교부 북미 지도자간 직접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 『연합뉴스』 2018년 5월 27일.

53) 乔艳红, “东北亚情势: 期待朝美领导人会晤如期举行并取得成功,” 『路透社』 2018년 5월 27일.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밝혀 향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5월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깜짝 회동과 트럼프 대통령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재개 추진 발언에 대해 “우리는 유관국들의 상호 교류와 최근 진전 상황을 주목했다.”며, “관련국들이 상호 관계에서 보여준 선의와 한반도 비핵화 추진, 지역평화와 안정 수호에 보인 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북 양측이 판문점선언의 대화와 화해, 협력 정신에 따라 남북 정상이 두 차례 회동에서 나온 공동인식을 잘 구현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대화과 협상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 관계를 개선하며 한반도 완화추세를 이어가고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는 북미 지도자의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미 양국이 최근 한반도에 나타난 완화 추세를 귀하게 여기고, 인내심과 선의를 보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여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둔 긍정적인 성과에 대한 축하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는 등 시종일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3)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제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언급된 대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열렸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후속 협상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방북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북미협상에 위기가 생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생겨난 시기이며, 9월 19일 ‘백화원’에서 비핵화와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 체육 분야 등 5개 분야에 합의하면서 『평양공동선언』⁵⁴⁾에 서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중국 외교부 경창 대변인은 9월 1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통령이 11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북한 비핵화와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한반도 이웃나라로서 중국은 남북이 접촉해 대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지지한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따라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양국과 지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바람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또한, “우리는 남북정상이 평양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도움이 되고,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며, 하루 빨리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과 공헌을 하겠다.”⁵⁵⁾고 덧붙였다.

54)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나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 조치들을 제시했고,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구와 내용이 빠졌지만 전쟁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미대화 촉진,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등 『판문점선언』에 따른 후속 실행문서의 의의를 가짐.

55) 蒋晓桐, “2018年9月18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东方网』 2018年 9月 18日.

뿐만 아니라, 중국 공영방송 CCTV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전후 과정을 서울과 평양 특파원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북한이 최고의 예우로 대한 것은 남측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의 표현’⁵⁶⁾이라고 평가하였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것’⁵⁷⁾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주일 전 러시아에서 열린 제4회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현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으로 이들이 노력하고 우리는 협조해야 한다.”⁵⁸⁾라고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남북미 외에 중국도 당사자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북미협상 등 한반도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라면 일단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태도변화로 해석되며 향후 중국의 입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 북중정상회담

1) 제1차 북중정상회담

중국의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북중정상회담이 성사되지

56) 赵森, “朝鲜打破常规 提前报道文在寅即将访朝消息,” 『央视网』 2018年 9月 18日.

57) 陆睿, “韩朝签署 <9月平壤共同宣言> 致力将搬到见长“永久和平地带”, 『新华网』 2018年 9月 19日.

58) 申铎, “习近平: 朝鲜问题当事方是朝韩美,” 『亚洲报道』 2018年 9月 14日.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실험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와 대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책임대국(責任大國)’을 지향하는 중국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무시하고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중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7년 만인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자 2018년 3월 25일 전격적으로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였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무대에 첫 등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

제1차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3월 2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북중관계를 견고히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중 양국 및 양당(兩黨) 간에 확고부동한 방침이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 깊은 소통을 나누고, 교류의 폭을 넓히며,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민심에 기초한 우의를 다지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북중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양국 국민들에게 행복과 나아가 세계 평화의 안정, 발전이라는 공헌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중국 역시 이를 도와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듭 표명하였고, “중국이 제시한 ‘쌍궤병행(雙軌並行)’⁵⁹⁾과 함께 유관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역내 및 세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중 양국의 고위층 간 상호 방문은 전통.”이라

59)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진핑 주석이 ‘쌍중단(雙暫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함께 북한 핵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임.

고 강조하면서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상호 방문 및 특사파견, 서신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북중 간 큰 틀에서 고위층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⁶⁰⁾고 밝혔다.

이처럼 제1차 북중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실리추구에 밝은 북한과 중국의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평창동계올림픽 국면부터 북미정상회담 성사까지의 과정에서 이른바 ‘중국소외론’으로 고립감을 느끼던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訪中)을 상황 전환의 ‘호기(好機)’로 간주하여 최고의 환대로 끌어안으며, 북중관계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냉랭하던 양국관계를 개선하는 데 치중했다.

2) 제2차 북중정상회담

제1차 북중정상회담 이후 43일 만인 2018년 5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다롄(大連)시를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제2차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으로는 6월 12일 개최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기준을 종전의 CVID보다 한 단계 더 높은 PVID 및 폐기 대상에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까지 포함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조건을 계속 높이는 미국을 향해 중국이라는 카드를 내세워 협상의 균형추를 맞추고자 의도한 측면이 작용했다. 중국 역시 미중 무역분쟁 및 대만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영향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고, 북중관계를 강화

60) 博訊北京, “习近平访朝是否有时间表?外交部回应是个涉朝问题,” 『博訊新闻网』 2018年 3月 29日.

하여 향후 전개될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에서 중국의 지분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루어졌다.⁶¹⁾

이에 중국 외교부 경창 대변인은 5월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북중 양국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은 북중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두 정상은 만남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영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⁶²⁾고 강조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북중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며 우리가 이룩한 합의를 실천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두 나라는 공동운명체, 변함없는 순치관계이고, 정세가 어떻게 흐르든 북중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려는 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⁶³⁾이라고 밝혔다.

제2차 북중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였으나 북중관계의 밀착은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변화 과정에서 미국에 불편함을 야기하여 중국이 견제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게 된다.

3) 제3차 북중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정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9일 또다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제3차 북중정상회담을 갖고 미국과 비핵화 후속 협의를 시작하기 전 다시 ‘우군(友軍)’을 찾음으로써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후속 대책 및 대북제재 해제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중국 공영방송 CCTV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에 대해 철저한 비밀주의를 추구하던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 및 주요 활동 모습을 매일 보도했으며, 이는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무대가 베이징이었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북중관계의 긴밀함과 더불어 중국의 대(對)북 영향력이 여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⁶⁴⁾ 또한, 시진핑 주석은 국제정세와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의 당과 정부는 북중관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인민이 북한인민에 대한 우호관계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사회주의 북한을 지지하는 것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3가지 변할 수 없는 것’⁶⁵⁾을 주장하였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제3차 북중정상회담 당시 중국을 방문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의 본 일정을 하루 앞당기면서 다른 국가 정상과의 일정을 급히 바꾸는 등 북중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가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61) 이성현, “중국이 보는 김정은 재방중과 한중관계,” 『정세와 정책』 제6월호(2018), p.5.

62) 燕勳, “外交部: 保持中美经贸关系健康稳定发展 符合双方利益,” 『人民网』 2018年 5月 8日.

63) 李志强,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在大连举行会晤,” 『新华网』 2018年 5月 8日.

64) 박병광, “중국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제6월호(2019), p.47.

65) 杨青山, “关于中朝关系, 习近平说了三个‘不会变’,” 『中国学习』 2018年 6月 22日.

4) 제4차 북중정상회담

2019년은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7일부터 3일간 자신의 35번째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외교 분야의 핵심 참모들을 대동하고 다시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제4차 북중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예고 직후 이루어졌다는 점과 제1차 북중정상회담 개최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에 무려 네 차례나 개최된 점을 미루어봤을 때, 북중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밀착된 상황에서 열려 또다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⁶⁶⁾ 특히, 가시권에 들어선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및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방안 성격인 제4차 북중정상회담은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새해 초 방중을 통해 정치와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기조를 다지고, 기존의 대북제재 국면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1월 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공개하라는 질문에 대해 “시 주석의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설명하면서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⁶⁷⁾며 직접적 언급은 회피했다. 이는 앞서 제1, 2차 북중정상회담 시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때, 중국 관영언론과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빠져나간 뒤 동시에 보도했고, 3차 방중 때는 김 위원장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에 이 사실을 전달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것에

66) 정재홍, “김정은의 ‘새로운 길’과 4차 북중정상회담의 평가 및 시사점,” 『서울평양뉴스』 2019년 1월 15일.

67) 巩盼东, “应习近平邀请 金正恩对中国进行访问,” 『中广网』 2019年 1月 9日.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선대의 유업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 북중 간 전통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북중 간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미 한반도에 평화와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국제사회가 모두 기대하는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한반도 비핵화 견지와 남북관계 개선,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적극 지지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실현시켜 나갈 것.”⁶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춰 이루어진 제4차 북중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 대(對)미 협상 등에 대한 북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군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격상시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대(對)중국 포위전략을 사전에 무력화시키려는 등 상당한 시사점과 전략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제5차 북중정상회담

제4차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들이 2019년 북중관계의 최대 이벤트가 될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합의하면서 6월 20일 평양에서 제5차 북중정상회담이 개최하였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요청에 화답하는 성격으로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무려 네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답방 요청에 호

68) 王佳宁,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新华网』 2019年 1月 10日.

응한다는 차원에서 언제 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중국은 제5차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중수교 7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의 우의를 증진하는 것과 더불어 한반도 정세에서 존재감을 갖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⁹⁾

시진핑 주석은 제5차 북중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우의는 양국 인민들의 바람이고, 양국의 근본적 이익과 시대 발전의 조류에도 부합하며, 대국적으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함으로 어떠한 국제적 풍랑에도 흔들릴 수 없다.”며, “현재 국제 및 지역정세가 매우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 있지만 양국이 고위층 교류를 강화해 양국 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북중관계 발전의 큰 방향을 확실히 다잡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인민들에게 더 큰 복지혜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중국은 북한과 당(黨)의 국가통치 경험을 교류하며 서로 배우기를 원하고,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경제, 사회, 교육, 스포츠, 지방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협력 추진을 통해 양국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며, 북한이 합리적으로 안보와 경제발전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 정부가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며, “북한 및 관련 당사국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⁷⁰⁾이라고 강조하였다.

69) 박병광, “중국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제6월호(2019), p.50.

70) 鞠鹏, “习近平: 共同开创两党关系的美好未来,” 『人民网』 2019年 6月 21日.

이처럼 중국은 북중 간 우호협력을 중시하며, 중국의 국가통치 경험에 대한 교류 및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북중수교 70주년’이라는 상징적 이유도 있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악화일로를 걷는 미중관계의 전환점 마련을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북미대화의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북미정상회담

1) 제1차 북미정상회담

한국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극심한 대립관계 속에서 최근까지도 전쟁위기를 겪었던 북미 양국 간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처음으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유해송환 등으로 회담 결과 이 사안들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담아 『공동성명』⁷¹⁾을 발표하고,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후속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특히,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은 적대 관계를 지속해온 양국 간 신뢰 형성과 관계정상화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꼽히며, 포괄적 합의 이외에 CVID 등 구체적인 조치와 시한이 합

71) 그동안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던 북미 양국이 외교적 해법 및 서로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평화공존할 수 있는 평화체제 모색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의문에 답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⁷²⁾되지만 상호 존중을 통한 관계개선 의지 및 북미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하면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6월 12일 『외교부성명』을 통해 “60여 년 넘게 적대관계였던 양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대등한 관계로 대화했다는 점에서 회담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긍정적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⁷³⁾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중국이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외교부 정례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6월 12일 경창 대변인은 오랜 적대관계였던 북미 양국 정상이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점과 『북미공동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는 점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적이고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다.⁷⁴⁾

또한, 6월 13일 정례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으로 한반도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특히,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는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이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증명하는 것.”⁷⁵⁾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동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해 기존 중국의 대(對)북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이해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해 영향력과 주도권을 확대하려는 등 ‘중국소외론’을 불식시키고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60일 만에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여 왔고, 유해송환 등 지난 회담에서의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등 3가지 합의사항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욱 진전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 서명 없이 끝났고, 합의 도출이 무산된 후 북미는 책임공방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합의문 서명식 취소를 알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영변 이외 핵시설 폐기를 제안한 데 반해 북한이 경제제재 해제를 강경하게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결국 합의문에 서명할 수 없었다고 밝히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원칙과 접근법에서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2월 2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한반

72)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북중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제18-27호(2018), pp.1-2.

73) 吴嘉林, “外交部就朝美领导人会晤发表声明,” 『搜狐网』 2018年 6月 12日.

74) 符仲明, “2018年6月12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中国经济网』 2018年 6月 12日.

75) 胡洪江, “6月13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央广新闻』 2018年 6月 13日.

도 비핵화 과정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미 수십 년이 된 한반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였고, “북한과 미국이 계속 대화를 유지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배려하여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을쓰기를 촉구한다.”⁷⁶⁾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을 2월 28일 방중 한 북한 이길성 외무성 부상을 면담한 자리에서 ‘호사다마(好事多磨)⁷⁷⁾’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양측이 신념과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것을 주문하고,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⁷⁸⁾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환구시보(环球时报)는 ‘회담결렬이 실망스럽지만 북미 양측이 호의를 가진 상태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여전히 낙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고, ‘비핵화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결코 한반도 상황을 회담시작 이전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⁷⁹⁾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 전역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과 경제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영변지역에 대한 비핵화를 주장한 북한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되었으며,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북한과 같은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에 기반한 ‘쌍궤병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북중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이어

76) 赵亚萍, “朝美会晤后金正恩是否会同中方会面?” 『网易新闻』 2019年 2月 28日.
 77) ‘좋은 일에는 탈도 많다.’라는 뜻으로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르거나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78) 刘鹏林, “王毅会见朝鲜外务省副相李吉成,” 『新京报』 2019年 2月 28日.
 79) 王抬, “第二次金特会为何没有达成协议,” 『环球网』 2019年 2月 28日.

질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론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자국 중심의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지역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강대국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미중관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동북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포함한 각종 교류를 확대하여 유대관계를 높여 나가는 등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 모습을 보이기 위해 평화적 발전관에 기초한 대외관계 형성을 통한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발전전략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북중관계 및 미중관계,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 동아시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해결과제인 북한 문제는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황으로 결국에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대화 및 협상 방식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이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일 것이다. 이에 남북 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국면 완화,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북한의 ‘조언자’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

라 중국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루는 것이지만 주변국들의 보장 없이 유지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나아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며, 격변하는 동아시아 국제환경에 있어 현명하고 현실적인 안보의식과 종합적 국익을 고려한 국가적 해안 마련과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곽덕환. 2015. “중국의 부상과 중미관계 변화.” 『동아인문학』 제31집. pp. 535-557.
- 김강녕. 2019. “중국의 대북정책·북중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글로벌정치연구』 제11권 1호. pp.32-69.
- 김진호. 2014. “시진핑 방한으로 본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한중관계.” 『중국과 중국학』 제23호. pp.145-176.
- 김홍규 엮음. 2015.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안보』. 서울: 동아시아재단.
- 나영주. 2016.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민족연구』 제65호. pp.64-91.
- 마틴자크, 안새민 역. 2010.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서울: 부키.
- 문대근. 2013. 『중국의 대북정책: 정책 결정 요인 연구』. 서울: 늘봄플러스.
- 문정인. 2010.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병광. 2019. “중국의 대북정책과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제6월호. pp.41-59.
- 백우열·함명식. 2017. “중국의 대한국 공공외교 성과와 한계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51권 5호. pp.135-159.
- 서상문. 201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전략연구』 제63권. pp.66-103.
- 심재훈. 2018. “中외교부 북미 지도자간 직접 대화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 『연합뉴스』 2018년 5월 27일.
- 왕 원. 2018.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와 한중관계의 위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이기우. 2014. 『중국의 대미국 전략 변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이동률. 2019.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 pp.157-192.

이상만·한동균. 2019. “남·북·중 지정학적 협력의 정치경제.” 『한중사회과학 학회』 제17권 3호. pp.7-40.

이성현. 2018. “중국이 보는 김정은 재방중과 한중관계.” 『정세와 정책』 제6월 호. pp.5-8.

이희욱 외. 2012. 『1992-2012 한중관계 어디까지 왔나』.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정재홍. 2015.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한반도 다자안보체제 구축 가능성 고찰.” 『중국지식네트워크』 제5권 1호. pp.26-40.

_____. 2019. “김정은의 ‘새로운 길’과 4차 북중정상회담의 평가 및 시사점.” 『서울평양뉴스』 2019년 1월 15일.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2018. “북중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제18-27호. pp.1-8.

하만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유연한 접근 필요.” 『아시아투데이』 2019년 6월 20일.

한광희. 2010. “중국의 대한민국 정책 결정요인.” 『EAI-CISS NASD 2010 Security Briefings Series』 제3호. pp.1-20.

한동균. 2019.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가 중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분석.” 『무역연구』 제15권 2호. pp.263-281.

Gill, Bates. 2011. “China’s North Korea Policy.” Special Report 283.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July. pp.1-16.

Jack S. Levy. 2008.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Rise of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11-33.

博讯北京. “习近平访朝是否有时间表?外交部回应是个涉朝问题.” 『博讯新闻网』

2018年 3月 29日.

成淑君. “甲午风云中朝关系.” 『凤凰网』 2017年 7月 11日.

符仲明. “2018年6月12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中国经济网』 2018年 6月 12日.

巩盼东. “应习近平邀请 金正恩对中国进行访问.” 『中广网』 2019年 1月 9日.

韩东均. 2018. 『韩国对华直接投资对中国经济增长影响的实证分析研究』. 中国人民大学博士学位论文. 北京: 中国人民大学.

胡洪江. “6月13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央广新网』 2018年 6月 13日.

蒋晓桐. “2018年9月18日外交部发言人耿爽主持例行记者会.” 『东方网』 2018年 9月 18日.

鞠鹏. “习近平: 共同开创两党关系的美好未来.” 『人民网』 2019年 6月 21日.

蓝雅歌. “习近平即将访韩 日本焦虑韩媒兴奋.” 『人民网环球时报』 2014年 6月 20日.

李佩. “专家折王毅访潮: 中朝关系更进一步, “中国被边缘化”无依据.” 『澎湃新闻』 2018年 5月 7日.

李志强.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在大连举行会晤.” 『新华网』 2018年 5月 8日.

刘鹏林. “王毅会见朝鲜外务省副相李吉成.” 『新京报』 2019年 2月 28日.

陆睿. “韩朝签署 <9月平壤共同宣言> 致力将搬到见长“永久和平地带.” 『新华网』 2018年 9月 19日.

乔艳红. “东北亚情势: 期待朝美领导人会晤如期举行并取得成功.” 『路透社』 2018年 5月 27日.

申铨. “习近平: 朝鲜问题当事方是朝韩美.” 『亚洲报道』 2018年 9月 14日.

孙哲. 2013. 『新型大国关系: 中美协作新方案』. 北京: 时事出版社.

王佳宁.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新华网』 2019年 1月 10日.

王抬. “第二次金特会为何没有达成协议.” 『环球网』 2019年 2月 28日.

吴嘉林. “外交部就朝美领导人会晤发表声明.” 『搜狐网』 2018年 6月 12日.

杨青山. “关于中朝关系, 习近平说了三个“不会变.” 『中国学习』 2018年 6月 22日.

杨婷, “2018年4月27日外交部发言人华春莹主持例行记者会.” 『新华网』 2018年 4月 27日.

吴婷婷, “2018年3月7日时事新闻(国内+国际).” 『联创世华』 2018年 3月 7日.

燕劭, “外交部: 保持中美经贸关系健康稳定发展 符合双方利益.” 『人民网』 2018年 5月 8日.

尹航·张旗, “出席十二届全国人大二次会议解放军代表团成立.” 『解放军报』 2014年 3月 4日.

赵森, “朝鲜打破常规 提前报道文在寅即将访朝消息.” 『央视网』 2018年 9月 18日.

赵亚萍, “朝美会晤后金正恩是否会同中方会面?.” 『网易新闻』 2019年 2月 28日.

邹志强·丽江, 2013. “崛起语境下的中美新型大国关系.” 『政治理论』 第138期. pp.54-58.

[i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https://www.fmprc.gov.cn>).

[i2]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요약

• 국문

21세기 들어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이 오히려 미중 간 경쟁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최근 한반도 외교 및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크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이 동아시아지역 정체성과 비전에 있어 더욱 많은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북한과 동아시아 주요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접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한국의 올바른 대(對)동아시아 정책 수립 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자국 중심의 실용주의적 외교노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지역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는 주변국들의 보장 없이 유지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격변하는 동아시아 국제환경에 있어 현명하고 현실적인 안보의식과 종합적 국익을 고려한 국가적 해안 마련과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동아시아, 중국의 인식,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필자 소개 (원고 게재순)

• 영문

One of the most remarkable phenomena in the 21 century is the rapid rise of China. However, the rise of China deepens the conflicts and competitions between US and China. Furthermore, as chairman Kim Jong-un shows his strong will on promot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turned its focus to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situation that China put more influence on the East Asia regional identity and vision, this study examines the China's perception and approach on East Asian changes by analyzing several summits. This is very important for South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ppropriate East Asia policy and minimize its side effect. In general, China has shown a positive reaction to the recent East Asian change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Sinc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inauguration, China has been expanding its influence by coordinating its interests with the powers in order to maintain stability and peace in East Asia based on its pragmatic diplomatic strategy. Moreover, in terms of historical and geopolitical aspects, stability and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are very difficult to maintain without supports by neighboring countries. In this dynamic East Asian international environment, our efforts to create national benefits considering realistic security awareness and comprehensive national interests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East Asia, perception of China, Inter-korea summit, North Korea-China summit, North Korea-US summit

■ 도종윤

현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이며 한국유럽학회 연구이사, 'EU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임.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및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을 졸업함.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교(ULB)에서 정치·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연세-SERI EU센터 Post-Doc 및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건국대 시간강사를 역임함.

주요 출간물로는, “환유를 통한 국제정치 텍스트의 해석: 유럽연합의 대북 전략 문서를 시험적 사례로”, “유럽회의주의와 2014 유럽의회 선거 이후의 전망과 과제”, “국제정치학에서 주체 물음: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유럽연합의 개발·협력 전략: 대아시아정책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의 행위자로서 유럽연합: 이론 논쟁과 실제”, “유럽연합의 KEDO 가입: 참여 요인, 평가 그리고 합의”, “EU 매뉴얼: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번역서) 등이 있음.

■ 손정욱

현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외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을 역임함.

주요 논문으로는 “노동시장 이원화와 반응성의 정치”, “사회협약, 당파성, 불평등의 정치경제”, “전환기 기민주의 복지국가 고용정책 변화와 정당정치: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등이 있음.

■ 한동균

현재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한중사회과학학회 사무차장 및 중국지역학회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임.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난카이(南开) 대학에서 국제경영학 석사, 중국인민(人民)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 연구원 및 북경 소재 중앙민족(民族)대학교 강사를 역임함. 중국경제, 한중 경제관계, 동북아경제, 북중관계 등이 주요 관심분야임. 최근 연구로 『한국의 대(對)중국 직접투자가 중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방안』, 『중국과 베트남 개방정책이 북한에 주는 함의와 당위성 연구』 등이 있음.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총서 48

2019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인 쇄: 2019년 12월 28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편 자: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인: 부성욱

발행처: 도서출판 오름

등록번호: 제2-1548호(1993. 5. 11)

주 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80-8 서일빌딩 4층

전 화: (02) 585-9122, 9123 / 팩 스: (02) 584-7952

E-mail: oruem9123@naver.com

ISBN 978-89-7778-508-3 93340